

2015년도

정 기 보 고

(정책연구소 현황 및 연간 활동실적)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미래정치센터 연간활동실적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재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5층			○		

「주」 1. 「기타」는 중앙당의 부속시설(당원교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2. 설치형태의 어느 하나에 “v”표시를 합니다.

나. 인력

연구원 수	직원 수	비고
박사급: 1명	자체고용: 1명	
석사급: 8명		
기타: 5명	외부파견:	
합계: 14명	합계: 1명	

「주」 연구원과 직원수는 월평균 숫자를 기재합니다.(소수점 이하 절상)

다. 활동경비

(단위 : 원)

수입				지출	잔액	비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계			
637,086,686	4,533,425	102,854,273	744,474,384	658,901,285	85,573,099	

「주」 정책연구소 회계보고 내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주요 활동 실적

가. 연구개발실적(201건)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210~0310	보건복지	보육종합대책	자체	20P	
0410~0510	보건복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당 대응방향	자체	10P	
0910~1010	보건복지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 고 방안	외부전문 가	62P	
1020~1210	보건복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본 보건의료비 지출실태 현황과 해결방안	외부전문 가	55P	
1014~1210	보건복지	복지예산 분석과 한국의 복 지정책 과제	자체	102P	
1021~1121	산업자원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동반성 장	자체	33P	
1005~1210	환경노동	최고 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외부전문 가	33P	
0424~0430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체	3p	
0509~051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체	4p	
0523~0529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자체	3p	
0606~0612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의 문제 및 개선대안	자체	4p	
0620~0626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자체	3p	
0704~0710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정부 연구개발지원 중도해약 연구비 회수 저조... 전액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704~0706	안전행정 위원회	유능한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자체	3p	
0710~0722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2016년 정부 R&D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체	3p	
0725~080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박근혜 정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 인적교체 보다 리더십-관료체계 이원화 전략 필요	자체	4p	
0810~0818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대기업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 빠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미진-	자체	4p	
0822~0828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중소기업, 정부지원 활용미흡+창조경제센터 낮은 기대... R&D 강화 및 맞춤형 원스톱센터 필요	자체	3p	
0828~0903	안전행정 위원회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자체	4p	
0904~0910	안전행정 위원회	돌고래호 침몰, 국민안전처 초동대처 또 실패.. 반면 예산은 1년 만에 7천억 증가	자체	5p	
0910~0917	안전행정 위원회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개혁방향	자체	18p	
0918~0924	안전행정 위원회	정부,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에 전액전가... '빵셔틀' 다름없어	자체	5p	
0925~1002	기획재정 위원회	정부 담뱃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증세 입증! -경제학적·재정적 접근 재검토를 중심으로-	자체	9p	
1010~1016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노벨 과학상 왜 못받나.. R&D 투자·연구환경 등 구조문제, 파괴적 혁신 필요	자체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023~1029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정부 노벨상급 젊은연구자 1천명 양성... R&D투자·연구환경 혁신 없는 노벨상 조급증	자체	2p	
1120~1104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막대한 R&D 투자에도 왜 노벨 과학상 한 명 배출하지 못할까	자체	3p	
1118~1124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R&D부정비리신고센터 유명무실... 접근성, 홍보 강화 절실	자체	3p	
1212~1217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역격차와 자원의존성 대단히 심각	자체	3p	
1224~1230	안전행정 위원회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 속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자체	9p	
1101~1231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위원회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개발	자체	24p	
1101~1231	안전행정 위원회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개발	자체	14p	
0105~0116	금융	2015년 금융부문 동향	자체	6p.	
0120~0130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	3p	
0201~0212	금융	박근혜정부 금융정책평가	자체	3p	
0302~0310	금융	금융개혁과제	자체	3p	
0510~0521	금융	안심전환대출	자체	3p	
0521~0531	금융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901~0910	금융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자체	3p	
0913~0924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자체	4p	
1001~1005	경제	재벌개혁 5대과제	자체	28p	
1210~1218	경제	미국중국의 경제불안	자체	3p	
1001~1210	금융	금융기관지배구조입법방향	자체	53p	
0101~0430	환경노동	청년비정규직현황과 대안	외부전문 가	50P	
0115~0130	환경노동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자체	5P	
0220~0305	환경노동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문제	자체	10P	
0307~0314	환경노동	청년실업, 대기업 청년고용의 무제	자체	6P	
0320~0410	환경노동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방안	자체	7P	
0416~0510	환경노동	비정규직 대책2- 산별교섭확대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자체	15P	
0501~0522	환경노동	산재입증 책임의 전환 방안	자체	4P	
0101~0109	외교통일	2015 북 신년사와 남북관계 전망과 주장	자체	3+3P	
0127~0209	외교통일	난관에 처한 대화의 실제 해법과 경험피해 대안 촉구	자체	8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420~0430	외교통일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인식과 대안	자체	10P	
0509~0513	외교통일 /국방	북의 SLBM 실험, 파장과 올바른 대응	자체	4P	
0601~0612	외교통일	남중국해 갈등 고조와 미군 탄저규 유입, 균형외교 등 자주적.적극적 정책 필요	자체	4P	
0715~0807	외교통일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의 메시지 기초	자체	11P	
0815~0828	외교통일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과 전망, 주장	자체	4P	
0901~0910	외교통일	중국 전승절 참석 적극 외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향후 과제	자체	4P	
0912~1020	외교통일	미중 양강 시대, 한반도와 동아시아평화 달성의 비전	자체	20P	
1116~1120	외교통일	중국-대만 정상외교의 분단 후 최초 만남과 남북관계	자체	4P	
1210~1218	외교통일	남북 당국회담 결렬,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철수 배경과 파장	자체	4P	
0401~0106	외교통일 / 국방	진보의 외교.통일.국방 전략	공동 연구	70P	
0105~0109	국토위	부동산3법 통과와 문제와 대안제시	자체	5P	
0410~0416	국토위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대과제 10대 정책 제시	자체	18P	
0514~0529	국토위	고소득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분석	자체	4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507~0512	국회운영위원회	2015년, 영국 총선 결과 분석	자체	4p	
0507~0512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여론 분석	자체	2p	
0521~0526	법제사법위원회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 분석	자체	2p	
0528~0602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분석	자체	2p	
0603~0608	국회운영위원회	미국 대중 정치성향 분석	자체	2p	
0611~0616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 관련 여론 분석	자체	2p	
0618~0623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사회 중국위상 여론 분석	자체	2p	
0625~0630	안전행정위원회	메르스 사태 여론 분석	자체	4p	
0709~0713	국회운영위원회	미국 대통령 지지율 분석	자체	2p	
0629~0713	법제사법위원회	동성결혼 합법화 연구	자체	4p	
0709~0714	안정행정위원회	글로벌위협 관련 여론 분석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0716~0721	외교통일위원회	아베 신조 '정권위기론' 여론 분석	자체	3p	
0814~0820	국회운영위원회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사 분석 비교	자체	5p	
0820~0825	국회운영위원회	캐나다 총선 관련 여론 분석	자체	2p	
0801~0915	국회운영위원회	해외 정당 강령 분석	자체	26p	
0903~0908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노동개혁 관련 여론 분석	자체	3p	
0917~0922	국회운영위원회	미국 총선, 여론관련 전략 분석	자체	2p	
1010~1015	외교통일위원회	한미관계 관련 미국여론 분석	자체	2p	
1016~1021	국회운영위원회	19대 국회 활동평가 및 20대 총선관련 연구	자체	4p	
1020~1029	국회운영위원회	2015년 캐나다 총선 결과 분석	자체	2p	
1020~1130	국회운영위원회	정당 및 국회 공약 개발 -선거제도 및 시민정치 분야	자체	18p	
1102~1110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자체	2p	
1102~1123	국회운영위원회	청년층 투표율 분석	자체	3p	
1114~1119	안전행정위원회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120~1125	안전행정위원회	지자체 청년수당 관련 여론	자체	3p	
1210~1215	국회운영위원회	미국 대선 여론조사 분석	자체	3p	
1216~1221	국회운영위원회	안철수 신당 관련 여론 분석	자체	3p	
0105~0108	여성가족위원회	저출산 극복에 실효성 없는 출산장려금	자체	2P	
0130~0204	여성가족위원회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이 필요	자체	5P	
0409~0410	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자체	3P	
0510~0514	여성가족위원회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자체	3P	
0608~0611	여성가족위원회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예정	자체	3P	
0623~0625	여성가족위원회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자체	3P	
0102~0110	안전행정	대통령인사권	자체	3P	
0115~0123	안정행정	공직윤리	자체	4P	
0126~0205	안전행정	공무원 윤리	자체	3P	
0201~0312	국회운영위	정부의 재벌정책	자체	31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211~0312	국회운영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	31P	
0217~0227	안전행정	정부 국정운영	자체	3P	
0301~0313	안전행정	공무원 부패방지	자체	5P	
0314~0327	안전행정	공무원연금개혁	자체	5P	
0401~0410	안전행정	국민안전처 개혁	자체	3P	
0413~0430	안전행정	공공기관 개혁	자체	4P	
0505~0820	보건복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호관계분석	자체	22P	
0518~0529	안전행정	공적연금체계 개편	자체	4P	
0601~0612	안전행정	국가 위기관리 대응	자체	4P	
0614~0626	안전행정	국민안전처 조직위상	자체	3P	
0701~0904	보건복지	복지국가 개혁방안	자체	13P	
0814~0828	안전행정	국민연금 기금운용	자체	3P	
0901~0910	안전행정	위기관리 콘트롤 타워	자체	5P	
1001~1016	안전행정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개혁	자체	5P	
1018~1029	안전행정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조직분석	자체	2P	
1108~1120	안전행정	중앙정부-지방정부 업무갈등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205~1217	안전행정	대통령 시행령과 입법 사안 분석	자체	3P	
0107~0109	국회운영위원회	1월 1-2주차 정세분석전망 : 신년 초 정세와 대응	자체	4P	
0120~0122	국회운영위원회	1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연말정산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타	자체	3P	
0122~0129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양당제의 덫, 대통령의 추락과 존재감 없는 제1야당 부상	자체	3P	
0203~0205	국회운영위원회	2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여전히 당청 관계에서 새누리당 무시 전략 일관	자체	4P	
0310~0312	국회운영위원회	3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미대사 테러, 종북논란과 재보선 정국	자체	4P	
0312~0319	외교통상위원회	사드 배치 논란과 기로에 선 한국 외교전략	자체	4P	
0324~0326	국회운영위원회	3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자체	3P	
0325~0401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정의당 정치개혁 방안	자체	8P	
0326~0724	안전행정위원회	기자가 본 정의당	자체	15P	
0407~0409	국회운영위원회	4월 1-3주차 정치정세전망 : 4.29 재보궐 선거	자체	4P	
0413~0422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국회의원 360명 확대 방안	자체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423~0430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의 적반하장 대응	자체	4P	
0428~0430	국회운영위원회	4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자체	3P	
0512~0514	국회운영위원회	5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자체	3P	
0527~0529	국회운영위원회	6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자체	2P	
0608~0615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공포 넘어서기	자체	5P	
0610~0612	국회운영위원회	6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자체	3P	
0608~0625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예비내각제 현실 가능 방안	자체	8P	
0624~0626	국회운영위원회	6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자체	3P	
0722~0724	국회운영위원회	7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자체	3P	
0825~0901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지역선거구 획정 대응	자체	3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826~0828	국회운영위원회	2015년 8월 5주~9월 1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확대	자체	3P	
0908~0910	국회운영위원회	9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 : 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강화 일로	자체	3P	
0914~092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가치와 의미	자체	6P	
0916~092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 비례대표제 변천과 의미	자체	3P	
0922~0924	국회운영위원회	9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 : 양당 모두 총선 주도권 둘러싼 내분 심화	자체	3P	
1014~1016	국회운영위원회	10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 새누리당의 쟁법	자체	3P	
1020~1120	국회운영위원회	정당 및 국회 개혁 공약 개발	자체	23P	
1027~1029	국회운영위원회	2015년 10월 5주차~11월 1주차 정치정세 : 역사교과서 전쟁 전망	자체	3P	
1118~1120	국회운영위원회	11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 여진 계속	자체	3P	
1215~1217	국회운영위원회	1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탈당과 영향	자체	3P	
1222~1229	국회운영위원회	무능한 정치 넘어서기	자체	5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102~0121	안전 행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자체	20p	
0102~0108	안전 행정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전망	자체	3p	
0122~0131	안전 행정	정치인 출판기념회 규제 등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자체	10p	
0125~0205	안전 행정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체	5p	
0201~0210	안전 행정	스웨덴 선거제도 연구	자체	10p	
0221~0227	안전 행정	박근혜 정부 2년 지방자치 정책 평가	자체	3p	
0224~0225	안전 행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자체	2p	
0225~0302	안전 행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실현방안	자체	10p	
0302~0310	교육문화체 육관광	누리과정 땀질식 합의 문제점과 보육대란 해결방안	자체	8p	
0302~0312	안전 행정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점과 대응방안	자체	3p	
0303~0312	안전 행정	석패율제 검토	자체	10p	
0321~0326	안전 행정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폐지 요구의 문제점	자체	3p	
0420~0429	안전 행정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제도	자체	10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0421~0430	안전 행정	2015년 지방재정 현황분석	자체	4p	
0502~0514	안전 행정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방안	자체	4p	
0522~0526	안전 행정	공직선거 후보자 사퇴시기 제한의 문제점	자체	5p	
0601~0622	안전 행정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	자체	15p	
0702~0722	안전 행정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과 지방재정 위기 해법	자체	14p	
0801~0830	안전 행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뮬레이션	자체	20p	
0801~0824	안전 행정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이해	자체	12p	
0801~0831	안전 행정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의견	자체	15p	
0803~0822	안전 행정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자체	11p	
0902~0911	안전 행정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문제점	자체	3p	
0908~0910	안전 행정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옥죄는 2016년 예산안	자체	3p	
0921~0924	안전 행정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문제점	자체	3p	
0928~0930	안전 행정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점	자체	2p	
1223~1228	안정 행정	정당후원회금지헌법 불합치결정 의미와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자체	4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 량	비 고
1015~1214	안전행정	지방자치 분야 정책공약 개발 방향	자체	26p	
1130~1209	안전행정	지방재정 악화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	자체	6p	
1201~1207	안전행정	석패율제 도입 논의 비판	자체	7p	
0823~0828	환경노동	고용보험법 개정 전망과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제	자체	3p	
0905~0910	환경노동	2016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	자체	4p	
1001~1005	환경노동	청년희망펀드와 임금피크제	자체	3p	
0921~1021	환경노동	국회 인턴·입법보조원의 일자리 실태와 대안	자체	14p	
1030~1114	환경노동	더 많은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책과제	자체	6p	
1115~1130	환경노동	실업안전망 전면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자체	6p	
1201~1215	환경노동	청년노동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자체	6p	
1008~1022	정치개혁특 위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과 다음세대의 정치	자체	10p	
1008~1022	정치개혁특 위	민주적 정당정치론	외부 전문가	19p	
1008~1022	정치개혁특 위	소명의로서의 정치	외부 전문가	19p	

연구기간	연구분야	주 제	연구방법	분량	비 고
1008~1022	정치개혁특위	선거의 이론과 실제	외부 전문가	14p	
1008~1022	정치개혁특위	정치적 말의 힘	외부 전문가	30p	
1008~1022	정치개혁특위	의회정치의 이해	외부 전문가	15p	
0817~0820	환경노동	임금피크제 와 청년실업	자체	2p	
2014.10.01 ~ 2015.02.05	국회운영위원 회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 -당 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	외부전문가	55p	
0225~0424	국회운영위원 회	한국 주류정당의 10대 약점 분석	외부전문가	149P	
2014.11.03. ~ 2015.03.16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외부전문가	53p	
0413~0810	국회운영위원 회	대안적 한국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	외부전문가	30p	
0710~1028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법 6조, 45조1항의 위헌성 및 개정방안	외부전문가	107p	

나. 토론회 등 개최(52회)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고
토론회	2015.01.08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비정규운동 현황과 새로운 전망찾기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현황과 실태에 대해 바로알고 비정규운동의 진단과 노동운동의 핵심과제, 정의당의 역할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1.22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	정의당의 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2.06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민주노총의 현주소와 정의당의 전략포인트	노동 및 민주노총에 대한 현주소를 짚어보고 정의당의 전략포인트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3.06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2015년도 한국정치 전망과 과제	2015년도 한국정치의 전망과 과제를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5.07 오후 4시30분 ~6시30분	중앙당 회의실	한국 주류정당의 약한 고리와 정의당의 지향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주류정당(양당)에 대한 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의당의 지향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5.27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영국 총선 결과와 의미, 정의당에 주는 함의	2015년 5월에 치러진 제56대 영국총선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 이것이 정의당에 주는 함의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6.25.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해 알아보고 피케티가 정의당에 주는 정치전략적 교훈과 함의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7.02.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전제조건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전제조건들과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토론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15.03.19.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차 한잔 합시다. - IS, 그리고 중동	분쟁전문저널리스트를 초청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IS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중동의 변화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3.26.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야권혁신과 진보정당	진보정당의 역사에 대해 짚어보고 야권혁신의 과제와 이에 맞는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4.02.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정의당은 무엇인가?	정의당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토론함	
토론회	2015.04.09.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청년정당 정의당을 위하여	청년층에 대한 정의당의 정책 및 젊은 정의당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모색하고 토론함	
토론회	2015.04.15.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혁신 언론과 혁신 정당	'혁신'에 대한 고민과 나아갈 바를 언론과 비교하며 토론함	
포럼	2015.04.06.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1)	우리사회의 통일 외교 국방에 대한 논의 지형과 진보개혁 진영의 성찰에 대해 토론함	
포럼	2015.05.11.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2)	군에 대한 민주적 문민통제(병영혁신과 무기비리 포함)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5.15. 오후 4시~6시	국회도서관	중앙선관위 정책선거토론 회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방안	
포럼	2015.06.08.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3)	증강되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처 등 앞으로 우리의 과제에 대해 토론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포럼	2015.07.14.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4)	미중관계와 코리아의 선택 -중국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토론함	
포럼	2015.08.25.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5)	한국의 대 중국 경제의존 실상과 외교안보적 함의에 대해 토론함	
포럼	2015.09.14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6)	8.25합의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 2013년 한반도 위기와 비교하여 토론함	
포럼	2015.10.12.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7)	대북정책,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을 넘어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 봄	
포럼	2015.11.11.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8)	북풍과 선거에 대해 토론함	
포럼	2015.12.16.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진보진영의 통일외교 및 국방전략(9)	통일론을 다시 생각해보며 올바른 통일론에 대해 모색해 봄	
포럼	2015.05.13.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생태사회전환 포럼(9차)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방안 -중소기업 생태계의 실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네트워크 현황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포럼	2015.06.17. 오후 3시~6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 실	생태사회전환 포럼(10차)	●재생가능에너지산업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시장 확대 필요성 -RPS의 퇴행적 운영실태와 개혁방안 -FIT제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여론조사	2015.06.04.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심층면접조사 (FGI)	노동 및 청년들을 대상 정의당 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 진행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등을 생산하도록 한다.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15.06.05. 오후 5시~6시30분	중앙당 회의실	대안적 한국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조건	노동주도 사회적 경제성장 담론전략을 중심으로 대안적 한국 정치 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과 조건을 모색하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세미나	2015.06.08. 오후 4시~6시	연구소 소장실	행복지수 개발	정의당 행복지수 개발을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가 살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토론함	
간담회	2015.09.02. 오전 10시~12시	의원회관	청년간담회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의당의 청년정책 구상에 대해 모색하고 토론함	
토론회	2015.09.08. 오후 4시~6시	민주정책 연구원	청년일자리 해법	청년의 일자리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봄	
간담회	2015.09.15.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고용보험 개혁방안	현행 고용보험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함	
토론회	2015.09.23. 오전 10시~12시	의원회관	청년일자리 확대방안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간담회	2015.10.08.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고용보험 개혁방안	고용보험 개혁방안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안을 듣고 방법에 대해 모색해 봄	
세미나	2015.10.08. 오후 7시~9시	중앙당 회의실	저자특강	국회에서 본 한국정치와 그 속에서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	
간담회	2015.10.28.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고용보험 개혁방안	현재까지 진행된 고용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보충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15.11.26. 오후 5시~7시	중앙당 회의실	FGI발표회	2016년 총선승리를 위한 정의당 지지층 프로파일에 대한 발표 및 토론	
토론회	2015.12.08. 오후 4시~6시	연구소장실	경제민주화	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의 개념, 과제, 방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토론회	2015.12.23. 오후 4시~6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송년기획토론회	2016년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과 도전-정치전략과 이슈, 아젠다 전망에 대해 토론함	
집담회	2015.01.29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 실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연말정산 사태에 대응해 전면적 조세개혁 방향 제시	
간담회	2015.02.11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 실	복지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 회단체 초청 간담회	“복지없는 증세”가 되는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청취, 복지확대와 공평과세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2015.3.1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 실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건강보험료 개편안(<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안)을 평가하고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마련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15.8.24	국회의원회 관 제5간담 회실	메르스 이후, 국가와 의료의 개혁 방향	국가방역체계와 함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 해 환자의 건강과 안 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 대안 제시	
세미나	2015.8.25	국 회 본 청 217호	공적연금 개혁방향 관련 전략 세미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 작으로 형성된 ‘공적 연금 강화 방안’에 대 해 당 입장 마련을 위해 진보개혁 진영의 관련 전문가 및 대중 조직 초청	
간담회	2015.10.14	국회 본청 216호	지역방송협의 정책간담 회	방송통신위원회(지역 방송발전위원회) 지역 방송 예산관련 및 지 역방송 현안 논의	
토론회	2015.10.28	국회 의정관 105호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토론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 입장을 듣는 자리	
토론회	2015.10.31	국회의원회 관 9간담회 의실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과제 토론회	동물권(보호권 또는 복지권)에 대한 법안 재개정 방향과 동물권 에 대한 인식의 확장 및 실천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토론회	2015.11.16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대기업 고위임원에 대해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간담회	2015.12.22	국회 본청 216호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단체 간담회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해 논의	

개최명	일시 (기간)	장 소	주 제	주요내용	비 고
토론회	2015. 8. 20	국회의원회 관 제2회의실	재벌에 대한 개혁 방안 논의	-재국내 재벌의 부적절한 소유구조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재벌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와 내용	
토론회	9.15. 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노사정합의	9.13노사정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9.23. 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노사정합의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토론회	11.16. 10: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최고 임금제도 입방안	CEO 등 대기업고위임원, 최고임금제도입	

다. 교육·연수활동(50건)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소 집합교육	2015-07-24.	우이동 대하정	상반기 진행사업 점검 및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	
연구소 현지교육	2015-08-26.	경기도 북한산성	2016년 총선의제 토론 및 공약 개발	
연구소 집합교육	2015.09.16.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새로운 진보정당, 혁신·전략·비전에 대해 성찰과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함	
연구소 집합교육	2015.10.05. ~ 2015.10.06.	국립 생태원	하반기 사업 진행사항 점검 및 재수립	
연구소 현지교육	2015.10.30. ~ 2015.10.31.	단명리조트	중앙당 및 시도당, 연구소 합동연수	
연구소 현지교육	2015.11.12. ~ 2015.11.13.	썬크루즈 리조트	중앙선관위 2015년도 정당·정책연구소 워크숍	
연구소 집합교육	2015.12.01. ~ 2015.12.02.	제주도 가시리 유채꽃프라자	중앙당 및 연구소, 지역정책담당자 합동 워크숍	
정예당원교육	2015.12.03. 오후 2시~4시	중앙당 회의실	2015년 정의당 성평등 교육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예당원교육	2015.12.03. 오후 4시~6시	중앙당 회의실	2015년 정의당 장애평등 교육	

「주」 연구소 집합교육·현지교육·통신교육·정예당원교육·지방당직자교육 등으로 구분 기재 합니다.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05.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차이와 이견은 과연 아쁘기만 한 것인가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06.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부분(들)의 미학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07.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본 강사의 정치관에 대한 비판과 간단한 답변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08.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정당론의 두 축 : 정당체계와 정당조직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09.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우리의 정당정치, 왜 나빠졌을까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12.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정당체계의 패쇄성 : 보수독점의 정당체계에서 양극화된 과두체계로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13.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지역주의 망국론’은 왜 잘못인가 I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14.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지역주의 망국론’은 왜 잘못인가 II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15.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정당에 대한 잘못된 이해 : 국민 포괄정당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16.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1부. 왜 정당인가? -1부의 결론 : 민주적 정당정치를 위하여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19.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정당활동가가 가져야 할 민주적 자부심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0.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챔피언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1.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현대판 호민관으로서의 정당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2.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시민정치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3.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국민후보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6.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의 원리와 역사 -정당정치에 대한 도전(전문가주의)	

교육.연수명	일 시간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7.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와 원리와 역사 -정당정치와 역사: 입헌주의, 대의제와 선거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8.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와 원리와 역사 -정당정치와 역사: 결사의 권리, 갈등과 싸움을 이해하는 방법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29.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와 원리와 역사 -정당정치와 역사: 보통선거권과 대정정당, 파당적 참여와 사회통합	
연구소 통신교육	2015.01.30.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2부. 정당정치와 원리와 역사 -정당정치와 역사: 좌파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02.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최고의 발명품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03.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04.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대의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촛불지상주의론)	

교육.연수명	일시 (기간)	장소	주요내용	비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05.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다른 무엇보다도 정당은 자율적 결사체다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06.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정당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09.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정당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가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10.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3부. 정당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11.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정당조직의 변화(정체성과 경쟁성)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13.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정당조직의 변화(정체모를 선거정당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13.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정당체계의 변화(사회균열과 정당체계)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16.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정당체계의 변화(왜 계층적/이념적 기반이 넓은 정당체계를 강조하나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23.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4부. 정당조직과 체계의 변화 -2개의 정당체계와 제3시민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24.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민주주의와 정당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25.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개헌론 비판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26.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선거제도론 비판	
연구소 통신교육	2015.02.27.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네트워크 정당론 비판	
연구소 통신교육	2015.03.02.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전문가, 지식인 중심의 정치쇄신 국민운동론 비판	
연구소 통신교육	2015.03.03.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강한국가, 약한 사회, 무기력한 개인	
연구소 통신교육	2015.03.04.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5부. 어떻게 하면 정당정치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세월호 사태가 남긴 것(정당이 바로서야 민주정치가 바로선다)	

교육.연수명	일 시 (기 간)	장 소	주요내용	비 고
연구소 통신교육	2015.03.05.	연구소 홈페이지	[정당의 발견] 정치 양극화, 무엇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연구소 통신교육	2015.03.06.	연구소 홈페이지	모든 강의를 끝내고 나서	

라. 정책 홍보(63회)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224	정책브리핑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박근혜정부 2년 평가 - 경제, 노동, 복지, 주거, 지방자치,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0506	정책논평	상동	공무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제대로 된 국민노후보장,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	
0529	정책논평	상동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1019	정책논평	상동	보험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0112	정책논평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015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경제정책방향	
0327	정책논평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안심전환대출 부작용	
0612	정책논평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	
0623	정책논평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서민금융지원방향 서민금융총괄기구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224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게시 및 당원 이메일발송	박근혜정부노동정책평가: 2년 만에 거의 실종	
0227	정책브리핑	상동	친기업 노동정책으로 일 관한 박근혜 정부2년	
0313	정책논평	상동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본 간접고용노동자의 직 접고용문제	
0319	정책논평	상동	청년실업문제,대기업청년 고용의무제로 해결해야	
0327	정책브리핑	상동	노사정위원회 합의 가능 할까?	
0406	정책논평	상동	노사정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에 묻지말라	
0410	정책브리핑	상동	노사정위원회, 정부의 조 정실패로 합의결렬	
0429	정책논평	상동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 차 해소를 위해선 큰폭 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 요	
0430	정책브리핑	상동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 차 심화	
0515	정책브리핑	상동	두 노동조합 활동가의 죽음과 여전히 참담한 노동현실	
0528	정책논평	상동	현재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 유감	
0529	정책브리핑	상동	정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인권위의 퇴행적인 의견 발표	
0610	정책브리핑	상동	[정의당 비정규직 대책1]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0610	정책브리핑	상동	[정의당 비정규직 대책2] 산별교섭 확대 및 단체 협약효력확장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612	정책브리핑	상동	최저임금 얼마나 인상될 까?	
0615	정책논평	상동	메르스대책에 노동자 휴 업수당 지원 포함돼야	
0617	정책논평	상동	정부1차 노동시장개혁 방안 유감	
0701	정책논평	상동	산재에 대한 노동자입증 책임 전환해야	
0709	정책논평	상동	최저임금 6,300원, 저임 금노동자 생활보장하기 엔 너무 낮아	
0710	정책브리핑	상동	2016년 최저임금 6,030 원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하기엔 너무 낮아	
0714	정책논평	상동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 상자 넓혀야	
0728	정책논평	상동	핵심이 빠진 정부의 청 년고용대책	
0805	정책논평	상동	최저임금준수 방안 마련 해야(1)	
0828	정책브리핑	상동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와 세 가지 제언	
0910	정책브리핑	상동	밀어붙이는 정부, 돌아 서 웃는 경영계, 진퇴양 난 한국노총	
0924	정책브리핑	상동	정부 여당, 노사정위 합 의조차 무시하는 '5대 노동법안'제출	

일시 (기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고
0102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015 북 신년사와 남북관계 전망, 주장	
011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2015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룰 적극적, 구체적 제안이 부재하다	
0202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5.24조치 관련 피해 현황과 정의당의 입장	
0210	정책브리핑	상동	난관에 처한 대화의 실제 해법, 경험 피해 대안 촉구	
021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세계 10위 국방비 지출 대 안보의 총체적 난국, 안보달성 방법의 대전환 필요	
0310	정책논평	상동	정부여당의 '리퍼트 피습' 악용, 외교-안보-통일-민주주 의 다 버린다	
0318	정책논평	상동	사드 배치, 우리의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0423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아베의 폭주 지속, 방조·옹호하는 미국 정부, 투트랙 공식화한 박근혜 정부	
0428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유감,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	
0430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인식과 대안 (일본 사민당-정의당 간담회 참조 자료)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0513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북의 SLBM 실험, 파장과 올바른 대응	
0622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평화로운 미래는 과거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0701	정책논평	상동	병력감축 또 8년이나 미루려는 군, 약속을 지키고 강력한 국방개혁 실시해야	
0715	정책논평	상동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핵 문제 해결	
0807	정책브리핑	주요 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의 메시지 기조	
0903	정책논평	언론 배포 및 당 홈페이지 게재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실현을 위한 후속 노력 이어가야	
0918	정책논평	상동	일본 안보법안의 참의원 강행통과 규탄, 한국은 평화와 협력 외교 택해야	
2015.1.12	정책논평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의정부 화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부른 예고된 인재	
2015.1.13	정책논평	상동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은 대기업특혜에 불과하다	
2015.2.5	정세전망	주요당직자·전문가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정부의 어긋난 부동산대책, 전세대란	
2015.2.27	정세전망	상동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부동산정책 평가	

일 시 (기 간)	홍보매체	홍보방법	주요내용	비 고
2015.3.13	정세전망	상동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임차상인, 권리금 보호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2015.3.27	정세전망	상동	급속도로 진행되는 월세 전환, 시급한 세입자 보호 대책	
2015.4.7	정책논평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않은 정부의 서민주거비 대책	
2015.4.30	정세전망	상동	더욱 팍팍해진 서민 살림 -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확인된 주거 불안	
2015.5.15	정세전망	상동	난개발과 땅 투기, 지역 불균형을 불리울 ‘그린벨트 규제 완화’	
2015.6.12	정세전망	상동	국회 서민주거특위 기한 연장, 제대로 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2015.8.28	정세전망	상동	‘싱글족’ 500만 시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2015.9.8	정책브리핑	언론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9.2 부동산대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 제시	

마. 간행물 등 자료발간(17건)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118	도서	정의당 스토리	자체발간	500부, 지도부 및 당직자 배부 당원판매	
1022	도서	만화강령	자체발간	500부, 지도부 및 당직자 배부	
0922	도서	좋은기사쓰기 a~z	자체발간	200부, 블로그기자단 및 당원배부	
1228	토론회자료	2016년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	자체발간	100부, 토론회 참석자 배부	
0211	도서	생태사회전환포럼 연차보고서	자체발간	300부, 지도부 및 당직자 배부	
0129	토론회자료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자체발간	100부, 당 정책으로 반영	
0211	토론회자료	복지확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자체발간	50부, 당 정책으로 반영	
0310	토론회자료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쟁점과 대안 토론회	자체발간	100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0824	토론회자료	메르스 이후, 국가 와 보건의료의 개혁 방향	자체발간	50부, 당 정책으로 반영	
0825	세미나자료	공적연금 개혁방향 관련 전략 세미나	자체발간	30부, 당 정책을 정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발간일자	종 류	제 목	발간방법	발간부수 및 활용	비 고
1028	토론회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토론회	자체발간	100부, 당 정책으로 반영	
1031	토론회자료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정의당의 과제 토론회	자체발간	50부, 당 정책을 정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1116	토론회자료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	자체발간	100부, 당 정책으로 반영	
1222	간담회자료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단체 간담회	자체발간	30부, 당 정책으로 반영	
0914	토론회자료	9.13노사정 합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자체	100부/관련기관배 포 등	
0922	토론회자료	노사정 합의 후,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나?	자체	100부/관련기관배 포 등	
1115	토론회자료	CEO 등 대기업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자체	100부/관련기관배 포 등	

바. 그 밖의 주요활동(14건)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15-01-27	중앙당 회의실	제5차 연구소 이사회	-2014년 연구소 감사보고 서 채택의 건 -2015년 연구소 사업계획 안 심의·의결의 건 -2014년 결산안 및 2015 년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	
2015-05-15	의원회관 소회의실	중앙선관위 정책선거토론회	정책연구소 역할 강화 및 재정 확충 방안	
2015-06-23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출범식	-.기자단교육: 새내기 기자 들의 처음 기사쓰기 -.정의당 및 진보정의연구 소 소개 -.기자단 운영계획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	
2015-07-15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기획회의	-.기자단교육: 기사 코멘트 및 기사쓰기 재교육 -.월 우수 블로그기자 시상 및 의견수렴	
2015-07-20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간담회	기획회의 및 당내 유명작가와와의 간담회	
2015-08-13	중앙당 회의실	제6차 연구소 이사회	-소장 선출 의결의 건 -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 -부소장 교체 선임의 건	
2015-08-25	중앙당 회의실	연구소 블로그기자단(1기) 해단식	-우수 블로그기자 선정 및 시상 -운영성과 및 개선해야 할 사항 공유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15-10-17	대전 북까페 '이데'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1강)	-입학식 -변화의 정치학 : 민주주의는 왜, 어떤 정치를 필요로 하는가	
2015-10-24	무중력지대 G밸리	미래리더십 스쿨 (수도권, 1강)	-입학식 -변화의 정치학 : 민주주의는 왜, 어떤 정치를 필요로 하는가	
2015-10-31	대전 북까페 '이데' 무중력지대 G밸리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2강	-민주적 정당정치론	
2015-11-07	무중력지대 G밸리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3강	-막스베버는 진보적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했나	
2015-11-14	대전 북까페 '이데' 무중력지대 G밸리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4강	-정치적 말의 힘 -의회정치 다시보기 -선거의 이론과 실제 -진보정치의 역사와 과제	
2015-11-21	대전 북까페 '이데' 무중력지대 G밸리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5강	-선거의 이론과 실제 -진보정치의 역사와 과제 -정치적 말의 힘 -의회정치 다시보기	
2015-11-28	의원회관	미래리더십 스쿨 (충청, 수도권) 6강	-정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의 작은 오쇼 늘길을 개척하는 미래리더십에게 -졸업식	

일 자 (기 간)	장 소	활동명	주요내용	비 고
2015-12-04	중앙당 회의실	제7차 연구소 이사회	-연구소 시행세칙 개정의 건 -연구소 이사장 교체의 건	
2015-12-19	부산시당 광주 윤한봉 기념사업관	미래리더십 스쿨 (부산, 광주권) 1강	-입학식 -연구소장 특강 : 어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제 : 보육종합대책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10일 - 03월 10일(1개월 0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육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와 10대 정책’ 마련
 - 과제 1. ‘아이안전 무한책임제 실현’을 위한 3대 정책 마련
 - 과제 2. ‘아이 만족 보육 실현’을 위한 3대 정책 마련
 - 과제 3. ‘질높은 보육·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4대 정책 마련
- 연구성과
 - 당 정책으로 채택, 심상정 (원내)대표가 대책 발표 기자회견 진행.
 - 이후 당 공약으로 반영

주제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당 대응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04월 10일 - 05월 10일(1개월 0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 입장 마련 및 향후 공적연금 개편방향 제시 필요
- 연구내용
 1.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주요 경과 및 각계 입장 비교
 2. 공무원연금 개혁안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당 입장 제안
 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 제언
- 연구성과
 - 공무원연금 개혁안 평가에 대해서는 당 입장으로 채택
 - 공적연금 강화 방향은 당 입장으로 일부 수정해 반영

주제 :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09월 10일 - 10월 10일(1개월 0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I. 연구개요
 - 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현황과 개선의 필요성
 -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 2.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 논란
 - 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변화된 조건
 - I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의 현황과 평가
 -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편안 검토와 평가
 -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의 개편안과 평가
 - IV. 형평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방안
 -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몇 가지 논쟁지점
 - 2. 공평한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안
- 연구성과
 - 정진후 원내대표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 대표발의 / 기자회견
 - 당 정책으로 채택 및 당 민생대표정책으로 선정

주제 :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본 보건의료비 지출실태 현황과 해결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2월 10일(1개월 20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 직접 지출 보건의료비 수준, 최근 10년간 변화, 연간 보건의료비 지출 등을 살펴 보고, 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도출.

○ 연구내용

I. 서론

II. 가계동향조사 자료 분석 및 결과

1. 가계동향조사 개요
2. 가계동향 주요 현황 분석
3. 소득분위별 가계동향 분석

III.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

1. 우리나라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 특성
2. 가계 지출 보건의료비 해결방안

IV. 결론

○ 연구성과

- 당 정책 생산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당 정책으로 채택

주제 : 복지예산 분석과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4일 - 12월 10일(2개월 2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정부의 보건복지예산안을 평가하고, 한국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 연구내용
 - I. 서론
 - II. 한국사회 진단
 - 1. 현황
 - 2.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
 - II. 복지예산 분석
 - 1.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복지예산의 특성
 - 2. 복지분야 자원배분 추이 및 전망
 - 3. 정부의 복지지출 관리 수단
 - III. 한국의 복지정책 과제
 - 1.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 및 과제
 - 2. 지역 복지정책 과제
 - 3. 주요 입법 과제
 - IV. 결론
- 연구성과
 - 당 정책으로 채택. 공약으로 반영

주제 :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동반성장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1일 - 11월 21일(1개월 00일)
- 연구분야 : 산업자원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 시기 자영업의 위기에 대해서 특정 산업, 특정 계층의 고용과 소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I. 들어가며
 - II. 현황 및 대안
 - 1.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까지, 설 곳을 잃은 구멍가게와 동네 슈퍼
 - 2.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안 모색
 - 1)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 (정의당 입법발의안을 중심으로)
 -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III. 나가며
- 연구성과
 - 당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입법안 제시 및 중장기적 대안 제언)

주제 :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05일 - 12월 10일(2개월 0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의 임원의 보수 또한 일반 직원과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우선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대기업 임원보수제한을 통해 그 폐해를 완화시키려 함.
- 연구내용
 1. 들어가며
 2. 현행 법 상 대기업 임원 보수 결정에 대한 제도 현황
 3. 각국의 동향
 4. 그동안의 연구 요약 및 시사점
 5. 보수제한의 필요성
 6. 보수제한의 구체적 방식
 7. 결론

※ 최고임금법 제정법률안 제시
- 연구성과
 - 당 정책으로 채택. 공약으로 반영.

주제 :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4일 - 4월 30일 (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실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상위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지표의 개선대안 제시
- 연구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의 진행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족, 종합적 메타평가로써 기능 부족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 메타평가로 거듭나기 위한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4가지의 구체적인 추가지표를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광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9일 - 5월 15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우후죽순 설립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연구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설립상황을 점검하고, 센터 설립과 초기 활동과정 상 혼선과 한계를 분석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계 및 실질적 역할을 재검토함. 향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을 위해 센터 역할 및 중장기적 전략 등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실효성 없는 R&D 혁신방안의 문제와 개선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3일 - 5월 29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R&D 혁신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지적하고, 실효성 높은 R&D 혁신방안을 다시 제안함.
- 연구내용 : 정부가 제시한 R&D 혁신방안이 실효성 없는 이유를 과학기술계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과학기술 출연(연) 지배구조상 현실적 괴리감 등을 제시하는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기함. 향후 실효성 높은 R&D 혁신방안을 3가지 측면에서 제기하고, 틀이 아닌, 내용의 전환을 촉구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 불공정한 연구비 배분의 문제 및 개선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6일 - 6월 12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이 진단한 한국 과학기술의 연구비 배분 문제를 바탕으로 개선대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과학기술자상 수상자들이 진단한 한국 과학기술의 문제는 예산배분 불공정성, 현장과 소통 부재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있었음. R&D 예산배분의 문제를 출연(연)과 과학기술인들의 돈줄과 연구방향을 틀어쥔 정부에서 지적함. 향후 개선대안으로 출연(연) 재정지원 방식 전환, 과학기술 정책결정시 현장 과학기술계 인사 대폭 확대, 실질적 정부-현장 정기적·실질적 협의기구 조직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에 기업자금 유치, 과도한 기업특혜 및 편법상속 우려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0일 - 6월 26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새누리당에서 입법발의 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에 따라 기업자금 유치를 위해 과학기술신탁 설치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기금고갈 문제의 해법을 제안함.

○ 연구내용 : 과학기술진흥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서상기의원 등이 기업자금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신탁 설치법안이 과도한 기업특혜 및 세금 탈루 및 편법상속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향후 해법으로 기금 정상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기금운용 부실 책임 인정, 복권수익금 전입문제 해결, 방만한 기금사업 효율화 및 불요불급 사업의 미래창조과학부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연구개발지원 중도해약 연구비 회수 저조, 전액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7월 4일 - 7월 10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연구과제 중도해약에 따른 손실액 및 연구비 미환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비 사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 예산낭비 방지 대책 등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연구과제 중도해약의 사유가 크게 연구태만, 연구자 도덕적 해이 및 불성실 등 연구자의 명백한 과실로 정리함. 미환수 금액이 최근 3년간 2,200억원이며, 중도해약 및 미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강력한 처벌조항 미비를 지적하고, 각종 부정적 영향을 분석함. 향후 개선대안으로 관련 처벌조항 신설, 연구재단 처벌규정 강화, 자체적 감사 및 내부 징계 절차 마련, 정부와 국회 보고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유능한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 연구기간 : 2015년 7월 4일 - 7월 6일(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가별 행복지수와 정부역량 수준 간 상관성을 보여주고, 행복과 욕구의 관계를 통해, 정부의 국민욕구 단계별 불충족을 지적하고, 좋은 거버넌스를 향한 요소를 제안함.

○ 연구내용 : 국가별 행복지수와 정부역량 수준 간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OECD 통계와 정부역량 지표를 활용하여 보여줌. 행복과 욕구의 관계를 토머스 모어의 주장을 빌어, 욕구는 행복의 필요조건임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머스로우의 욕구5단계설을 보여줌. 정부가 국민의 욕구 5단계별 불충족 하는 이유를 최근의 통계와 어려운 한국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용어들을 예로 들면 제시함. 결론적으로 향후 국민행복을 제고하는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정부역량 아그나포스라는 정치학자의 주장을 빌어 6가지로 제시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주제 : 2016년 정부 R&D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0일 - 7월 22일(13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6년 정부 R&D 예산 발표를 소개하고, 투자방향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2016년 정부 R&D 예산을 3천억원 감축한 것에 대해, 긴축재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과학기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성과 위주 투자, 바뀌지 않는 중점 투자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향후 R&D 예산낭비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연구개발재원 효율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또한 혁신적 중점 투자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연계협력, 기초원천 연구 집중, 창조경제혁신센터 허구성 및 기존 중기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함. 아울러 현장 과학계 및 산업계 인사 과학기술정책 및 예산 결정 조직(위원회)에 제도적 참여 보장, 단계적·창의적 예산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박근혜 정부,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인적교체 보다 리더십-관료체계 이원화 전략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5일 - 8월 5일(11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며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결국 주무장관의 책임보다 위기 관리 리더십과 내부 관료체계가 중요함을 지적함.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복지재정 전문가인 주무부처 장관에게 물어 경질함. 주무장관 한명을 문책하고 관련 전문가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나친 단순한 발상을 지적함. 메르스 문제를 주무장관의 역량 보다 위기관리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부에 감염병 관리 전문 관료체계가 부재한 것에서 문제를 찾음. 향후 전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 리더십과 내부 관료체계 구축이라는 이원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즉, 정치적 자원을 활용하는 리더십과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단계별 전문적 대응은 관료체계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임.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대기업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축소 빠져,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미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0일 - 8월 18일(9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 세법개정안에 당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R&D세액공제 축소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R&D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가장 큰 요인으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지적하고, 2015 세법개정안에 당초 박근혜 정부가 R&D세액공제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지적함.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거나 제고하되, 대기업 중견기업의 R&D세액공제는 각각 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중소기업, 정부지원 활용미흡+창조경제 센터 낮은 기대... R&D 강화 및 맞춤형 원스톱센터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2일 - 8월 28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소기업 R&D 지원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정부 주도 및 단기성과 위주 정책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정부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홍보가 부족하여 활용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기대가 낮고 R&D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았음. 향후,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홍보지원 담당 원스톱센터 설치·운영, 중소기업 R&D세액공제 재검토, 벤처·중소기업 R&D 투자 중기재정계획 하 계획적 증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재정립, 기술개발 실패 용인 구조 형성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2016 지방세법 개정안 : 일방적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8일 - 9월 3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2016년 지방세법 개정안 중 지방세 감면제도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정부가 발표한 2016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과 관련하여, 지자체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감면 확대, 그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 심화 및 지방분권 약화, 감면혜택 편익이 취약계층 및 서민보다 소수 개발건설업자와 기업에 집중 등 문제점을 분석함. 향후 대응방향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 지방세 감면제도의 대대적 정비 및 통폐합, 예비타당성조사 민간 참여 확대, 성역없이 독립성 강화, 비용편익 구조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돌고래호 침몰, 국민안전처 초동대처 또 증가 실패.. 반면, 예산은 1년 만에 7천억

- 연구기간 : 2015년 9월 4일 - 9월 10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 돌고래호 침몰 사건을 조직구조적 그리고 재난사고 시간대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처의 구조적 한계를 재난사고 단계별로 도출함. 향후, 돌고래 사고 등 해양안전 사고 대응체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안전처의 출범 과정과 역할, 예산 등을 정리함. 제2의 세월호 사건인 돌고래호 침몰이 또 다시 초동대처가 미흡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과정을 재난사고 시간대별로 자세히 분석함. 이러한 해양안전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을 평시의 출항선박에 대한 안이한 관리체계, 사고발생 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사고접수 대응체계, 표류예측시스템의 문제, 마지막으로 재난사고 보고체계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국민안전처 해안사고 대응과정에서 무능을 평시, 사고 발생 시, 사고 후 등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분석한다. 향후 개선방향으로 제대로 된 해양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평시에 해경본부 관리체계 정비(소형선박 출항통제 강화, 이상상황 상시 감지), 사고대응체계 개선(선조치 후보고 등 구조출동 시간 단축 노력), 거시적 국가재난대응체계에 대한 강도 높은 총체적 점검 및 개혁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0일 - 9월 17일(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 차원의 지역발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구상하고 구현시킬 초석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문제점 분석, 개혁방안을 제시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정의당과 기존 진보진영이 사회적 경제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의제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 그래서 정의당이 지역발전을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구상하고 구현시킬 초석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화과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음. 지특회계는 2005년 균형발전특별회계(노무현정부)로 시작해,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명박정부), 2014년부터 현재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모되었으며, 각 변화과정별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였음. 지특회계의 문제점으로 균형발전 부재, 재원증가 담보, 국고보조사업 성격 잔존, 지자체별 재정여건 미감안 동일한 보조율 설정, 지역발전 추진역량 부재, 부지매입비 지방부담 등이 지적되었음. 향후 지특회계 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거시적 목표는 ‘균형과 자율(발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균형적 지역발전 지향’으로 설정하고, 회계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계정명을 생활기반계정을 지역(자율)개발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균형발전계정으로 전환한 것을 제안하였음. 구체적인 개혁방향으로 재원규모의 점진적 확대, 진정한 포괄보조금화, 재정여건 감안 차등보조율 설정, 성장촉진지역 지역발전 추진역량 및 부지매입비 일부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누리과정예산 지방교육청에 전액 전가... '빡셔틀' 다름없어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8일 - 9월 24일(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영유아보육 정책의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액 전가시킨 것을 빡셔틀과 다름없다고 비판함. 향후, 누리과정 정부간 거버넌스 재설계 및 지방교육분권 강화 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영유아보육 사업 중앙-지방정부간 거버넌스는 정책결정은 국가이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분담은 국비·지방비매칭으로 영유아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상 무상보육,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음. 실제 2016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서 전액삭감 된 것을 보고, 누리과정 사업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비·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 임에도 지방에 재원을 전가시킨 것이기에 '빡셔틀'과 다름 없다고 비판함. 또한, 그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전가 폭탄 맞은 시도 교육청별 반발 상황을 정리함. 향후 누리과정 정부간 거버넌스를 우선, 자원분담비율을 중앙-지방간 6.5:3.5 매칭으로, 정책결정은 지방·시민과 나누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여를 제도적 보장, 둘째, 자원중립 관점에서 '15년 교육부 누리과정 미편성액인 1.7조원 만큼의 재원인 지방재정교부세율 0.88% 확대를 주장함.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청에 제한적 과세자주권 부여 부여, 단체장의 지방교육청 재원이전 방해 국가 규제 강화, 교부기준 상 학생 수 비중 가중치 확대 철회 및 지방교육채자주권 강화 등을 통한 지방교육분권 강화를 주장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담뱃값 인상의 금연정책 실패! 서민증세 입증! -경제학적·재정적 접근 재검토를 중심으로-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5일 - 10월 2일(8일)
- 연구분야 : 기획재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 정부 담배값 인상 제도변화 및 논란을 정리하고, 담뱃값 인상 금연정책을 경제학적·재정적 접근을 통해 재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함. ○ 연구내용 : 정부 담뱃값 인상은 담배소비자에 대한 징벌적 종과세로 정리하고, 실효성 등 꼼수 증세 논란을 제기함. 정부 담뱃값 인상을 우선, 경제학적 재검토에서, 중장기적 담배의 가격탄력성 및 수요량 감소 예측 실패, 흡연을 감소 실패 등을 지적함. 둘째 재정적 재검토로 세수확충 효과가 크며 서민증세 꼼수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부담금이 최대 2.2조원 증가 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금 제도라는 특수성이 내재된 활용방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지방재정은 오히려 축소 혹은 세수효과가 크지 않고, 국세 및 부담금 등 중앙재정 확충에만 효과가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했음. 향후, 담뱃값의 단계적 인상, 경고문구 표시 및 금연광고·홍보 강화, 레저활동 및 상담 지원, 담배값 세수 구성 중 지방세수분 기존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노벨 과학상 왜 못받나... R&D투자·연구 환경 등 구조문제, 파괴적 혁신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0일 - 10월 16일 (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기술 R&D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함. 선진국의 과학기술 R&D 지원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이상적 R&D 구축 방향을 제안함.
- 연구내용 : 노벨 과학상 미배출 원인을 정부 기초과학 투자와 인력양성 문제를 제기함. 한국 과학기술 R&D 지원의 문제점을 정부주도 일방적 시혜적 지원, 추격형 및 단기 성과창출 지원 집중 등 도전적·창의적 연구의 부재를 지적함. 창의적·고위험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선진국 과학기술 R&D 지원체계를 소개함. 향후, 기초연구 중심 가치사슬 단계별 전방위 지원, 연구기관(연구자) 자율성 확대, 양질연구 판단·평가능력 향상 및 평가제도 개선,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체계 내실화·다양화, 이상적 R&D 구축모형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 노벨상급 젊은 연구자 1천명 양성 R&D투자·연구환경 혁신없는 노벨상 조급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3일 - 10월 29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 노벨상급 연구자 양성사업을 소개하고, 내재된 본질적 문제를 지적함. 노벨상 배출의 지름길과 R&D 투자지원의 원칙을 제시함.
- 연구내용 : 정부의 노벨상급 연구자 양성 프로젝트 ‘넥스트 디케이드 100’을 소개하고, 이것을 노벨상을 올림픽 메달로 보는 정부의 지나친 정책개입주의를 지적하고 위험한 투기이자 도박으로 진단함. 향후 노벨상 배출의 지름길은 연구자의 자율성·독창성 확대, R&D 투자지원의 팔길이 원칙이 중요함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막대한 R&D 투자에도 왜 노벨 과학상 한 명 배출하지 못할까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4일(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막대한 R&D 투자에도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노벨 과학상 배출을 위해 과학기술 R&D에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함.
- 연구내용 : GDP 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임에도, 노벨 과학상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함. 노벨 과학상 미배출의 원인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R&D의 구조적 문제를 들며, 창의적·고위험 연구에 적극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R&D 지원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줌. 향후, 과학기술 R&D의 파괴적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및 R&D 우선순위 수립 구조의 혁신, 기초연구비 확대, 연구기관(연구자) 자율성 확대, 평가능력 향상,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 방향 및 체계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주장함.
- 연구성과 : 연구소 칼럼으로 제출함.

주제 : 미래창조과학부, R&D부정비리신고센터 유명무실... 접근성, 홍보 강화 철실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8일 - 11월 24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래창조과학부의 R&D부정비리신고센터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R&D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패쇄 등 접근성·인지도 등이 낮아 유명무실함으로 지적함. 구체적으로 접근성 및 인지도 저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신고의 절차 및 내용 등 각종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향후 R&D부정비리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신고접수 배너연결 원스톱화, 대학별 산학협력단 및 출연기관 및 그 연구진들에 의무적 홍보, 신고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절차 폐지, 증거서류 제출 일부 간소화, 신고서 양식의 수정 등 접수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KISTEP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지역격차와 자원의존성 대단히 심각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2일 - 12월 17일(6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3가지로 정리함. 향후, 균형적 지역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3가지의 혁신노력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적 처방을 제시함. ○ 연구내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분석결과, 시사점으로 지역격차와 자원·환경 의존성이 대단히 큰 반면, 수도·대전권 자원대비 성과가 낮아, 지역과학기술혁신 효율성은 자원·환경 의존성보다 네트워크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현재 과학기술혁신이 지방 수준에서 지극히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규현적 지역과학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간 격차해소에 중앙정부 차원 노력, 지역내 혁신주체(지자체, 지역출연기관, 산학)들의 네트워크 혹은 활동 역량 제고노력, 혁신노력 지역에 적절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제안했음.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정책적 처방으로 우선,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통한 지역혁신체제 허브이자 중간지원조직 역할 부여, 산하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둘째, 지역별 전략산업 연계 특화대학 지원 확대, 지역인재 육성 및 유출방지, 셋째, 서울·경기·대전과 타 지역 간 혹은 외국 지역과 실질적 협력 및 공동연구에 '과학기술 역량증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 속 누리과정 중단의 현실과 해법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24일 - 12월 30일(7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리과정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온 일련의 과정과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을 지적함. 또한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분석하고 향후 유아교육사업인 누리과정 재개를 위한 정의당식 중단·장기적, 근본적 해법을 제안함.

○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넘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적하는 내국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비판한다. 누리과정 시행이후,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잔액을 제시하며 지방교육채에 기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정부 이자지원 없는 지방교육채 승인규모 증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야권이 주장하는 누리과정 국가책임론, 정부 전액부담론이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만 한 현실적 해법과 장기적·근본적 해법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단기적 처방으로, 정부 이자 전액지원 전제 지방교육채 2.1조원 추가 설정,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2% 확대,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절반씩 부담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기적 해법은 정부 재정책임 확대와 지방결정권 확대 등 누리과정 중앙·지방간 복지거버넌스의 재설계이다. 구체적으로 중앙·지방간 매칭비율 6.5:3.5(서울 3.5:6.5),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의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이다. 마지막으로 근본적 해법은 과세자주권·지방교육채자주권 등 세입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세의 부분적 과표조정권 및 탄력세율권 부여, 취득등록세·담배세·재산세 등에 연동 지방교육세율 증대, 지방교육채 총액제한 폐지 혹은 확대, 누리과정 지방교육채 정부 이자지원, 지자체 교육청 법정전출금의 단체장 이전방해에 대한 강한 법적 책임 등이다.

○ 연구성과 : 정부행정 분야 '이슈페이퍼(보고서)'로 제출함.

주제 :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31일(61일)
- 연구분야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개발함.
- 연구내용 : 20대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1. 기초연구 역량 및 과학기술 연구자(기관) 자율성 제고 방안으로 5개, 2.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확대 방안으로 3개, 3.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 방안으로 2개, 4. R&D 예산의 적재적소 투명한 집행 방안으로 3개, 대국민 과학기술 흥미 제고 방안으로 1개 등 총 14개 공약을 제안함.
- 연구성과 : 20대 총선 정의당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제출함.

주제 :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일 - 12월 31일(6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을 개발함.
- 연구내용 : 20대 총선 지방자치 분야 공약을 1.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실현 방안으로 1개, 2. 지방분권 확대 방안으로 3개, 3. 주민참여 확대 방안으로 2개, 4. 균형발전 방안으로 1개 등 총 7개 공약을 제안함.
- 연구성과 : 20대 총선 정의당 '지방자치' 분야 공약으로 제출함.

주제 : 2015년 금융부문 동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16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금융부문 동향 전망 및 정책 대응과제를 연구함
- 연구내용
 - ICT와 금융 융복합 추세를 전망
 - 핀테크 즉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망
 - 금융규제 완화 및 건전성 감독 강화 필요성
 -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 당의 대응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인터넷 전문은행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0일 - 1월 3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금융규제완화, 신용위험확대, 소비자피해 우려에 대한 전망 및 대책 연구
- 연구내용
 -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인가기준과 업무범위
 -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이슈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개인정보 및 소비자보호 관련
 - 은행업의 비대면 채널 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
 -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차명계좌 등 불법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리스크 관리 방안
 - 당의 대응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박근혜정부 2년 금융정책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2월 1일 - 2월 12일(개월 11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금융부문에 대해 △ 기술금융인프라 구축 등 창조금융의 제도적 기틀마련 △ 보수적 금융문화의 혁신 △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정보유출 방지대책 마련 △ 금융시장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확립했다는 평가에 대한 진단과 대안 방향모색

- 연구내용
 -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등장한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문제
 - 과도한 고금리 및 약탈적 금융규제
 -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및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 규제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피아로부터 벗어나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금융기관 지배구조개혁 등을 입법 활동의 필요성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금융개혁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일 - 3월 10일(개월 8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신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임기 중에 꼭 해야할 금융개혁 정책과제를 제시. 전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수많은 정책적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촉구 주장
- 연구내용
 - 한국경제 위기의 잠재적 폭탄으로 커져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정책 수립과 적극적 시행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재벌그룹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 금산분리 원칙에서 벗어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 중단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방안 폐지.
 - 론스타와의 ISD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 상황 인식, 전향적 대책 촉구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그 내용이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 외화

주제 : 안심전환대출 전수대출 결과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0일 - 5월 21일(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안심전환대출 전수조사결과로 확인된 가계부채대책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전수 조사 경로가 금융위의 주장과는 달리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
 - 원금균등 상환방식의 경직된 제도에 의해 역설적으로 가계부채 압박을 더 받게 되는 결과
 - 정부의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가 감축 효과 주장에 대한 분석
 - 정부의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대출권장정책으로 문제점 분석
 -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정책 방향 제시.
 - DTI,LTV 등 부동산관련 금융규제를 강화
 - 다주택자들이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용접근 제한.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1일 - 5월 31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높은 공공성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모두 6개 업권별 개별법으로 규율해왔음.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 방향을 주장

○ 연구내용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도

-적격성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

-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주주에 대한 제제조치로 '의결권 제한'만을 명시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 입법토론회에서 제2금융권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심사를 대폭 강화 주장

주제 :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9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1.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연구.
- 연구내용
 - 미국의 금리인상의 1차 파급효과: 달러자산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달러화 강세, 국내에서 대미 수출은 증가
 - 미국의 금리인상의 2차 파급효과: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
 -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경계
 -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정책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당 지도부 및 대변인 등의 상임위 모두발언, 논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3일 - 9월 24일(개월 12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4개의 컨소시엄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해 각축. 인터넷 전문은행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 은행업 규제 완화에 대응
- 연구내용
 - 은산분리의 완화, 최저자본금 규제완화, 건전성 규제도 초기부담 완화
 - 전산설비를 구축할 때 외부 위탁을 허용
 - 계좌를 개설 할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많은 쟁점과 부작용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당 지도부 및 대변인 등의 상임위 모두발언, 논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재벌개혁 5대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0월 5일(0개월 5일)
- 연구분야 : 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재벌 경제력 집중의 폐해인 일감몰아주기, 기업간 양극화, 재벌의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한 입법과제를 연구하고 개정추진
- 연구내용
 - <황제경영 방지법> ; 순환출자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독립적인 감사 선출, 다중대표 소송 도입
 - <재벌독식 방지법>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복합쇼핑몰 규제, 대리점 상생협약 등
 - <초과이익 환수법>: 초과이익공유제, 초과사내유보금 공유 장려세제 등
 - <사회연대법>: 고위임금 최고임금제, 재벌과 부유층 과세
 - <좋은 일자리법>: 청년고용 촉진법(청년 의무고용 5%), 파견제 직접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정의당 소속 의원의 해당 상임위 활동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주제 : 미국 중국의 경제 불안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0일 - 12월 18일(0개월 9일)
- 연구분야 : 경제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 . 중국의 경제 불안과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을 연구

- 연구내용
 -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 중국의 급속한 경기둔화와 주가폭락
 - 한국경제는 2014년 1사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성장율의 둔화
 - 한국경제의 향방에서 중요한 수출부문 연구
 -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금융완화 기조 전망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정의당 소속 의원의 해당 상임위 활동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주제 : 금융기관지배구조 입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2월 10일(2개월 10일)
- 연구분야 : 금융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행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제도상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금융기관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목적
- 연구내용
 - 금융기관 지배구조 현황 및 문제점
 - 금융기관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 방향
 -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규율/임원자격제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감사위원회 경영진 감시기능강화
 - 노동자 참여 및 소수주주권 행사/대주주 적격성 규율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정의당 소속 의원의 해당 상임위 활동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비정규직현황과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4월 30일(4개월 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
- 연구내용 :
 - 1)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기간 : 2015.2.1~2.28
 - 설문대상 : 20대~40대 (312명)
 - 설문방법과 설문내용 : 온라인 오프라인병행, 내용은 인적사항, 고용관계, 사업장정보, 업무, 노동조건, 고용형태, 일자리만족도, 부채, 이직에 관한 의견 등
 - 2) 공공부문과 대기업 근무 청년 비정규직 대상 심층면접
 - 심층면접군 : 10명
 - 면접내용: 1대1로 고용형태, 계약기간, 노동조건, 업무만족도, 부당대우 경험 여부, 정규직전환 가능성 등
 - 3) 설문조사 결과 (1)비정규직의 고착화, (2)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 (3)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중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에 관한 부정적 인식 등을 확인하였음 (3)에 관해서는 기간제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70.4%로 압도적으로 많아,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의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 연구성과 : 청년비정규직의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됨

주제: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5일 - 1월 30일 (0개월 1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p>○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2년째, 노동관련 대선공약의 이행사항과 평가를 통해, 미이행정책의 이행촉구 등을 위한 대안마련</p> <p>○ 연구내용 :</p> <p>1)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주요 노동공약 16개항목의 이행상황 및 평가</p> <p>(1) 창업확대: 세부공약5개 / 3개 이행(이하 0/0으로 숫자만 표시함)</p> <p>(2) 스펙초월 시스템마련(5/2), (3) 청년해외취업확대(3/3)</p> <p>(4) 공공부문청년일자리 확대(2/2), 이 중 공공부문채용은 공공부문평가지표화, “청년고용촉진법”개정으로 청년고용의무제 시행(2016년까지한시) 등의 배경이 있음</p> <p>(5)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나누기(4/1) 휴일근로초과근로시간 산입 등은 축소추진 중</p> <p>(6) 정례해고요건 강화(취업규칙불이익변경 및 재량해고추진입법화)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제화)</p> <p>(7) 대규모집단해고시 고용재난지역선포(2014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p> <p>(8)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확대(2/2), (9)노인 일자리 확대 (2/0), (10) 여성일자리확대 및 모성보호(7/6) 여성훈련과정 및 “새로 일하기 센터”30개소 확대는 2013년 20개소, 2014년 10개 확대.</p> <p>(11)~(16) 중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인상기준마련,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리적 보안 등 노동계의 제도개혁의 쟁점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미이행이 많음</p> <p>2) 공약사항 중, 여성일자리 모성보호 등 출생율 향상을 위한 기반정비 등 사회복지관련 부문에서는 애초 제시 수준보다 미흡하나 공약이행 노력이 엿보이나, 노동시장의 양극화해소(정규/비정규직 격차해소), 건전노사관계 형성(정리해고, 복수노조, 대화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p> <p>○ 연구성과 :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 확인, 대선공약의 이행의지박약 오히려 공약은 반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노사관계 분열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치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선공약 이행촉구 및 당의 정책대안 마련에 기여함</p>

주제: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본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문제

- 연구기간 : 2015년 2월 20일 - 3월 5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p>○ 연구목적 : 최근 대법원의 사내하청 노동자불법파견(현대자동차, KTX 승무원) 관련 간접고용과 직접고용의 구분 판단기준을 확인,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해소에 관한 정책개발에 반영하고자 함</p> <p>○ 연구내용 :</p> <p style="margin-left: 20px;">1) 대법원의 직접고용에 관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사안별 적용</p> <p style="margin-left: 40px;">① 하도급(하청)기업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p> <p style="margin-left: 40px;">② 하도급(하청)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p> <p style="margin-left: 20px;">2) 현대차 인용 / KTX 기각이유</p> <p style="margin-left: 20px;">현대차 사례는 원/하청 노동자의 업무구분이 곤란하며, 원청사업내에 하청부문이 편입된 형태로 전체로 보아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함. 한편 KTX는 일부안전업무에서 원청의 관여가 있었으나, 전체로써 하청업무의 독립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함</p> <p style="margin-left: 20px;">3) 현대차 사안과 같은 유형의 판단기준은 판례로서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KTX사안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판단 시, 내용과 정도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판단이 유동적인 점을 확인함</p> <p>○ 연구성과 : 불법파견 해당성과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연구 및 개발 작업에 기여함.</p>

주제:청년실업,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 연구기간 : 2015년 3월 7일 - 3월 14일(0개월 8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청년실업률의 상승, 지난 10년간(2005년~2014년) 7% ~ 8%대에서 2015년 9.1%로 상승, 전체실업률은 3%대 추이로 안정적이거나 청년층에서만 변화폭이 커지고 있음. 청년의 구조적 실업해결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청년실업의 구조적 해결방안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등 신규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의 청년의무제 도입 가능성검토
 - 청년고용의무제는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1999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일본의 예로 후생노동성 “인사노무관리 연구회 ‘기업경영, 고용관행 워킹그룹’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식 일자리 나누기에 제도 설계 등을 검토, 진행 중)
 - 우선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제도 설계(인센티브제도 구상 등)
- 연구성과 : 현재 제외국 제도 비교를 진행 중이며, 이는 선거공약을 통한 구체화, 법제화를 전제로 연구 중

주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0일 - 4월 10일 (0개월 21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방안
 - 전체 노동자인구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약 40%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고착화 우려(고용노동부의 '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
 -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
- 연구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소방안 강구
 - 비정규직증가 원인은 기업의 인건비억제를 통한 이익우선 사고,
 - 선성장 후분배논리, 격차해소(선분배)를 통한 경제성장효과 기대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음. 논리전개의 배경에는 고령화사회대책 및 여성경제활동 및 모성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안정화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한 접근필요
 - 해결 방안으로서 낮은 노동분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인상 검토
 - 인건비저감 내지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수정은 기업체질개선, 즉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
- 연구성과 : 전체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져 가는 이유는 인건비 저감 외에 달리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연구노력 미흡, 해결방안으로 최저임금인상 정책에 관하여 연구 진행 중(노동정책개발)

주제: 비정규직대책2 산별교섭확대 및 단체협약효력확장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6일 - 5월 10일(0개월 24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노조 없는 비정규직에게도 단체협약 효력 확장방안 모색
 - 노동시장양극화(소득격차 확대)해소 방안 중 하나가 단체협약을 통한 격차시정
 - ILO “세계임금보고서” 는 단체협약적용률이 높을 수록 임금불평등률이 낮아지는 상관관계 있다고 보고함
- 연구내용 :
 - ILO의 조사보고를 통해, 단체협약의 확대적용률이 높은 국가의 임금불평등은 낮다(영국40%, 프랑스,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80%)
 - 경제민주화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기업울타리를 넘어 같은 업종 지역 등에 단체협약의 적용 확대 방안(독일형 등의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를 토대로)
 - 1) 산별교섭의제: 산별노조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업종별, 지역별 기준임금을 적용(지역적구속력에 유사)하고 여기에 기업별지급능력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
 - 2) 기업별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구속력의 적극 활용)
- 연구성과 : 산별교섭 제도화(정규,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토대로)를 제안

주제: 산재입증책임의 전환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일 - 5월 22일(0개월 23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법원의 업무상 재해(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재해인정기준) 관련 입증책임론 관련 헌법소원사건을 계기로 인권의 산재보험제도개선권고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 발의안 등의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및 하급심의 판결경향
 - 산재보상보험법은 일본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일본의 노동재해(우리나라 산재에 해당)소송에서는 업무상재해에 기인하였음을 노동자가 증명하기에 앞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입증책임전환)
 - * 안전배려의무(일본최고재판소 제2소재판부 1983.5.27 판결- 육상자위대 331회계대사건)의 범위와 정도, 특히 산재사고 발생예방이 사용자의 책임임 명확히 함, 이는 현재 학설, 판례상으로 확립됨
 - * 도요타근로기준감독서 과로자살 사건(행정소송)에서 대량관찰법에서 본인 중심설로 전환한 점과, 노동자의 건강안전배려의무 이행 등의 판단기준으로 노동자측의 입증책임을 전환 혹은 대폭경감시킴
- 연구성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심상정의원 공동발의의 “입증책임 분담”론을 정치(精緻)에 기여함

주제 : 2015 북 신년사와 남북관계 전망과 주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1일 - 1월 9일(0개월 9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의 주요 내용, 그에 대한 국내외 반응을 분석해 추후 남북관계를 전망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대책 정립 모색
- 연구내용
 - 북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주요 내용 분석
 - 한국 정부와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반응
 -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 당의 대응
- 연구성과 : 당 지도부 및 당직자, 당원들에게 관련 내용 브리핑,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 제고. 외부 전문가 등에게도 당의 입장 등 내용 공유.

주제 : 남관에 처한 대화의 실제 해법과 경협피해 대안 촉구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7일 - 2월 9일(0개월 14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북 간 경협 등 교류협력, 비핵화 등이 모두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당국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관계 당국의 전향적 정책 촉구, 특히 5.24조치 등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남북교역 분야의 피해 실태 전달 및 그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
- 연구내용
 - 남북대화 재개 난항과 그 대책
 - 남북교역(개성공단 외 북 내륙지역과의 교역) 중단 피해실태와 대책
 - 악화된 비핵화와 북미관계, 한국 정부의 대책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5.24조치 해제 촉구 남북경협 기업인’ 간담회의 참조자료, 국회 남북관계특위 심상정 의원의 참조자료 등으로 활용, 홈페이지 통해 당 관계자들에게도 공유

주제 :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인식과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0일 - 4월 30일(개월 11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아베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집단적자위권 행사가 동전의 양면인데 비해 한국 정부가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분석, 비판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일본 아베 정부 및 그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 분석, 비판
-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의 원칙과 과제
- 동아시아 평화 정착의 미래를 위한 대안적 접근법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5월 6일 진행된 일본 사민당-정의당 간담회의 자료로 활용

주제 : 북의 SLBM 실험, 파장과 올바른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5월 9일 - 5월 13일(개월 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국방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월 9일 북이 SLBM 실험에 성공했다는 주장 이후 언론은 물론 여야당 등 우리 사회가 즉자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황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인식,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

○ 연구내용

- 북의 SLBM 실험 성공 주장과 한국 언론 및 여야당 등의 반응, 그 문제점
- SLBM 전력화에는 아직 시간 남았고, '게임 체인저' 되기에는 미약
- 즉자적 대응과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 정책과 실천 필요

○ 연구성과 :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객관적 상황 인식, 전향적 대책 촉구 등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그 내용이 지도부의 발언을 통해 외화

주제 : 남중국해 갈등 고조와 미군 탄저균 양입, 균형외교 등 자주적·적극적 정책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일 - 6월 12일(개월 12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인공섬 건설 추진과 미국이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압박 동참 촉구,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발표 및 비밀 실험 진행 의혹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 즈음해 강대국 사이 균형외교 등 자주적 정책의 전개 필요성 주장

- 연구내용
 -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 고조와 미국의 한국 압박
 -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비밀 실험 진행 의혹
 - 강대국 사이 균형외교, SOFA 개정, 생화학무기와 물질 반입 금지 필요

- 연구성과 : 6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정의당의 메시지 기초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5일 - 8월 7일(0개월 23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8.15를 맞아 진행되는 일련의 행사 및 주요 이슈들과 관련해 당의 주요 지도부 및 당원들, 상황 인식 및 대내외 발신 메시지 등 대응에 기여. 나아가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

○ 연구내용

- 전반적 상황과 대응 기초
- 광복 70년, 과거사 청산 및 평화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 분단 70년 정전체제 62년,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제언

○ 연구성과 :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당원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서의 발언 등 메시지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과 전망, 주장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5일 - 8월 28일(0개월 14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 전개 필요성 주장

○ 연구내용

-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과 엇갈리는 전망, 이에 대한 분석
- 변화하는 국제정치 질서 속 조속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 정부 당국이 취해야 하는 정책 : 금강산관광 재재, 5.24조치 해제, 당국 간 회담의 수시 개최 노력

○ 연구성과 : 8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중국 전승절 참석 적극 외교 남북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향후 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9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통령의 중국 항일 전승절 참석, 남북 당국의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하며 향후의 과제에 대해 주장
- 연구내용
 - 중국 전승절 참석 적극 외교와 미국, 일본 등의 반응, 향후의 과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성사 관련 전망
 -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상시화할 필요, 그 현실화를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 등 전향적, 적극적 정책의 필요성
- 연구성과 : 8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당 지도부 및 대변인 등의 상임위 모두발언, 논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미중 양강 시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달성의 비전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일 - 10월 20일(1개월 2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종합적 진단 및 이런 질서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의 제고와 그에 입각한 대응책 등을 정립
- 연구내용
 -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대한 진단
 - 미중 양강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상관관계 등 보충
 - 3차원 평화 실현의 비전과 정책(일부 수정 보완)
- 연구성과 : 해당 문서는 졸고 “평화로운 한반도 달성의 기초와 비전(2013.12)”에 현 시기 미중 관계와 한반도-동아시아 평화의 상관관계 등을 보충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기존 문서는 당의 국가비전위에 보고, 당의 국가비전 정립 및 신강령 작성 등에 참조자료로 활용된 바 있음

주제 : 중국-대만 정상외 분단 후 최초 만남과 남북관계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6일 - 11월 20일(0개월 5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7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대만 마잉주 총통의 분단 후 최초 만남의 배경, 의의 등에 대해 분석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설 등과 맞물려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정부의 역할 등 주문

○ 연구내용

- 중국-대만 정상, 분단 후 최초 만남의 상황과 양안관계의 현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협의,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등 남북관계 관련 현안
- 양안관계가 남북관계에 주는 정책적 함의, 반기문 방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 연구성과 : 11월 3-4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남북 당국회담 결렬, 모란봉악단 첼수 배경과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0일 - 12월 18일(0개월 9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2월 11~12일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의 결렬, 12일 북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첼수의 배경과 그 파장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분석하고, 당의 입장 및 대응의 기초 제언
- 연구내용
 -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의 결렬과 그 원인
 -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첼수의 배경과 향후 북중관계와 북한의 정책 향방에 대한 함의 분석
 - 남한 당국 및 북한 당국에 대한 주문
- 연구성과 : 12월 3-4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외부의 관련 단체, 연구자 등에게 당의 입장 전달.

주제 : 진보의 외교·통일·국방 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일 - 12월 31일(9개월 00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국방
- 연구방법 : 공동 연구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외교, 통일, 국방 분야 주요 논점 및 대안에 대한 정립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일종의 포럼을 구성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군에 대한 문민통제
- 북핵의 객관적 실태 및 대응책
- 미중관계, 한중관계 등 국제질서와 외교안보 정책
- 8.25 합의 등 남북관계 현안 진단 및 통일과 평화의 관계 등

○ 연구성과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해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당의 정책의 정립에 큰 도움. 전문가들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진행되어 해당 분야 내용을 당원 등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총선 공약 준비 등에 도움이 됨.

주제 :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1월 5일 - 1월 9일(5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부동산 3법 통과로 예상되는 집값상승, 전월세가격 상승 등에 의한 세입자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
- 연구내용
 -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 재건축재개발규제 완화조치에 따른 재건축 시장의 고분양가 조장, 집값·전월세가격 상승에 의한 세입자 불안 심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아울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공정임대료제 도입,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주제 :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대과제 10대정책 제시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0일 - 4월 16일(7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4대 과제 10대 정책 제시
- 연구내용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로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세입자들의 ‘집 걱정 없는 봄날’을 목표로 1)계약갱신 1회 보장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2)공정임대료제 도입 3)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4)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을 제안함.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및 기자회견 개최

주제 : 고소득층 임대주택 '뉴스테이'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4일 - 5월 29일(15일)
- 연구분야 : 국토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발표한 뉴스테이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
- 연구내용
 -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의 지역별 임대료 현황을 조사하고, 중산층 소득별 뉴스테이 RIR 지수 산출, 뉴스테이 사업자 지원책 조사, 뉴스테이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뉴스테이가 고소득층의 임대주택사업임을 드러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임대료 인하, 재벌건설사가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의 사업자 전환 등 정책대안을 제시함.
- 연구성과
 - 소속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활동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1-3주차 정세전망 **- 영국 총선 결과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07일 - 5월 12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5월 1-3주차 영국 총선 결과 분석
- 연구내용: 5월 9일 영국 총선 결과, 영국 보수당은 의회에서 12개 의석 수 차이로 승리, 노동당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스코틀랜드독립당에 50석을 내어주며, 지난 총선 대비 40석을 잃음. 주요 실패원인으로 선거 전략에서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즉, 노동당은 선거 기간 동안 노동당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호감도 보다는 정책에 대한 지지층에 반응에 보다 집중하여, 선거를 소극적으로 치룬 것이 이번 선거의 실패요인으로 지목됨. 결국 일반 대중을 겨냥하지 않고 정책에만 집중한 노동당의 선거전략은 실제적인 대중의 호감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향후 정의당도 영국노동당의 총선 결과 분석에 대해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1-3주차 정세전망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07일 - 5월 12일(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5월 1-3주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과반이 넘게 나타남. 지지정당별로도 ‘현행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세대별 특징으로 20대는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지 않으며, 60세 이상에서는 국민연금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추세임. 특히,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장 긴 30대에서 현 개정안에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이는 젊은 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부 및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5주차 정세전망

-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1일 - 5월 26일(6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5월 5주차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 관련 국제사회 분석

○ 연구내용: 아일랜드에서 5월 23일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해 동성 간 결혼이 합법화 됨.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서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인식되어온 나라지만 이번 투표결과에 대해 아일랜드 여론은 반기는 분위기임. 이번 동성 결혼 합법화에 찬성한 대부분의 젊은 층이 가톨릭 학교 시스템에서 12년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가톨릭교회로선 추락한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현재,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한 국가는 20개국에 이룸. 한국은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결혼 등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성소수자 인권보호 관련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임. 향후, 한국에서도 동성 간 결혼 합법화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가정해 조면 이에 대한 정의당의 정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1주차 정세전망

-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8일 - 6월 2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6월 1주차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대한 여론 분석
- 연구내용: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함.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국회의장이 안건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 점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 '날치기'와 이를 막기 위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음. 이미 통과되었던 선진화법의 선진화가 향후 국회 운영의 개혁방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됨.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2주차 정세전망

- 미국 대중 정치성향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3일 - 6월 8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2015년 미국 대중 정치성향 분석
- 연구내용: 미국에서 스스로를 진보성향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미국 갤럽이 매해 조사하는 가치와 신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1%로 나타나며,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한 미국 국민의 평가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향후, 미국인들의 진보주의 성향 증가는 동성결혼이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변화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특히,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회 이슈는 전 세계적인 문화충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점점 더 부각되는 상황임. 따라서 사회 이슈에 관한 전반적인 진보성향의 증가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3주차 정세전망 - 인사청문회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1일 - 6월 16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6월 3주차 인사청문회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인사청문회가 끝난 6월 10일 긴급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증가함.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국민통합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황교안 총리 후보의 '도덕적 흠결'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또한, '국정동력 회복과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책임총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뒤따랐음. 이 같은 결과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여러 의혹이 무성함에도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이 같은 여론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여야간 공방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4주차 정세전망

- 국제사회 중국위상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8일 - 6월 23일(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6월 4주차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위상과 관련된 여론 분석
- 연구내용: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인들의 48%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41%는 긍정적으로 응답함. 이에 반해, 중국인들의 응답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 또한, 유럽 국가들은 모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함. 이 같은 국제사회의 여론 속에 6월 22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의 순향을 위해 중국의 부상 등 동북아시아 환경변화에 대응해야한다고 제언함. 향후, 국제사회에서 차지할 중국의 위상과 성장이 한일관계 뿐 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5주차 정세전망 - 메르스 사태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5일 - 6월 30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6월 5주차 메르스 사태 여론 분석

○ 연구내용: 메르스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도, 메르스 본인 감염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를 차지함. 또한,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을 삼가거나 모임을 취소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73%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정부신뢰가 상당히 부정적이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여전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하지만, 감염우려에 따른 불안 심리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은 불안 심리에 대해 크게 부정적이지 않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여론 인식이 정부와 대통령의 대응을 나누어 평가한다고 볼 수 있음.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7월 2주차 정세전망

- 미국 대통령 지지율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9일 - 7월 13일(5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7월 2주차 미국 대통령 지지율 분석
- 연구내용: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0%까지 상승함. 오바마 대통령의 참담했던 지지율은 2014년 11월 4일, 미국 의회 중간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완패와 야당인 공화당의 상원,하원 석권을 통해 심각한 레임덕이 지적된 바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 선거 참패 이후 워싱턴 정치와 적극적인 차별과로 위기를 돌파하였음.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웨이’라는 보통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내세워 이슈를 재구성하고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려도 과감히 밀어붙인 것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레임덕을 모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는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데 없이 ‘친박’, ‘비박’ 혹은 ‘배신정치’로 정쟁을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임.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동성 결혼 합법화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9일 - 7월 13일(15일)
- 연구분야 : 법제사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6월 3일부터 시작된 퀴어축제 이후 최근 3주 동안 이른바 '동성애' 논란이 전개됨. 성소수자와 관련된 사회 이슈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논란의 추이는 국제사회 여론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를 모색.

○ 연구내용: 동성결혼 합법화의 대중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동성애자와의 사회적 접촉이 동성결혼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강조되어옴. 미국 여론의 동성결혼 지지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동성결혼 지지에 교육과 사회적 접촉이라는 두 변수가 '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구성과: 한국 내 점점 더 확대되는 고학력시대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해지는 개인의 네트워크 경로까지 고려한다면,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는 미국 내 독특한 현상으로만 남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임. 향후, 한국 사회에서 대두될 사회이슈 중 하나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가능함.

주제 : 7월 3주차 정세전망 - 글로벌 위협 여론 조사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9일 - 7월 14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7월 3주차 국제사회 위협 여론조사 분석
- 연구내용: 기후변화, 세계경제 불안, 사이버공격, IS 등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목된 7가지 주요 현안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글로벌 위협 요인으로 지목됨. 흥미로운 점은 IS를 위협요인으로 지목한 한국인 응답자의 비율은 40개국 가운데, 레바논과 스페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더불어, 사이버 공격을 위협요인으로 지목한 한국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 한국인이 사이버테러를 IS위협 다음으로 큰 글로벌 위협으로 응답한 것은 인터넷 강국이라는 미명 아래, 사이버테러라는 위협이 공존함을 여론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7월 4주차 정세전망 **- 아베 신조 '정권위기론'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7월 16일 - 7월 21일(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7월 4주차 아베 신조 '정권위기론' 여론 분석
- 연구내용: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7월 18일, '안보법안'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이후, 아베 정권의 거침없는 폭주에 등 돌리는 여론은 앞으로 아베 정권이 당면한 숙제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심판대가 될 참의원 선거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여론의 지지율이 아베 정권을 위협하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임. 따라서 아베 총리는 권력 기반의 안정성을 수시로 점검해야할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어갈 아베 총리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사 분석 비교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4일 - 8월 20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 비교
- 연구내용: 여론조사에서 정확도와 신뢰도 문제는 늘 논쟁적인 부분임. 한국에서는 여론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음. 이는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라도 언론인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하여 보도할 시 벌금형을 받는데, 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셈임.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와는 달리 여론조사 정확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극복방안을 고민하는 것에 집중함. 전화조사가 가지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 상황. 따라서 향후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화 여론조사와 소셜 미디어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틀이 요구됨.
- 연구성과: 국내외 정세분석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캐나다 총선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0일 - 8월 25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캐나다 총선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10월 19일에 총선을 앞둔 캐나다는 주요 3당의 팽팽한 3파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각 당에 대한 지지율은 고유 강세 지역에서 우세를 유지하며,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냄. 하지만, 캐나다 국민의 과반수가 보수당 집권 이후, '생활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론의 절반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캐나다 국민의 생활문제에 대해 스티븐 하퍼 총리는 '저유가와 그리스 사태 등 대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하는 상황에서 보수당에게 유리할 것만 같지 않아 보임.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선부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앞으로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지지율 변화에 주목해야함. 이에 선거운동의 캠페인이나, 정당 내 소속의원들의 스캔들이 향후 선거의 방향을 정하게 될 것으로 분석됨.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해외 정당 강령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8월 1일 - 9월 15일(1달 15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해외정당 강령을 분석하여, 정의당 강령 영문강령 설립
- 연구내용: 해외 정당의 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문장들을 연구하여, 정의당 강령의 내용을 영문으로 설립.
- 연구성과: 국제사회에 정의당을 소개할 수 있는 당 홍보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2주차 정세전망 - 정부 노동개혁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3일 - 9월 8일(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9월 2주차 정부 노동개혁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임금피크제와 채용 및 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방안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특히,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이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2,3,40대에서는 적게는 60% 많게는 70%의 응답자가 노동개혁안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함. 이는 실제 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채용 촉진에 대해 실제 청년층의 기대는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청년이 중심이라고는 보기 힘든 개혁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4주차 정세전망

- 미국 총선, 여론관련 전략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7일 - 9월 22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9월 4주차 미국 총선, 여론관련 전략 분석
- 연구내용: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은 2014년 여름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로 대선 풍향계로 여겨지는 뉴햄프셔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샌더스 의원에게 밀렸음.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문제에 대해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받지 않고, 신속하게 사과하는 등 이메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정하였음. 또한, 대중적 이미지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사이에서 다시 반전의 지지를 받고 있음. 이 같은 여론의 흐름은 향후, 선거에서 후보의원이 스캔들에 개입될 경우, 신속한 사과와 이미지 개선이 적정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3주차 정세전망 - 한미관계 관련 미국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0일 - 10월 15일(6일)
- 연구분야 : 외교통일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10월 3주차 한미관계 여론 분석
- 연구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발표된 미국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8명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조사에서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66%로 나타남. 또한, 62%는 한국이 국제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함. 특히,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 국가로 꼽은 미국인을 상대로 이유를 묻자 양국 간 안보동맹을 언급한 사람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경제관계, 한국문화와 인적교류 등으로 이유를 꼽았음. 이는 한반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4주차 정세전망
- 19대 국회 활동평가
및 20대 총선관련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6일 - 10월 21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10월 4주차 19대 국회 활동평가 및 20대 총선관련 연구
- 연구내용: 19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의 대다수 신뢰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대 총선에서는 다른 의원이 당선되길 기대하며, 지역구의 현 의원이 교체에 대한 의향이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선거과정에서 현직자가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보다 일정정도 유리하다는 ‘현직자효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임. 대중이 현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한 불신이 2016년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캐나다 총선 결과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0월 29일(10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2015년 캐나다 총선 결과 분석
- 연구내용: 10월 19일 캐나다 총선 결과, 자유당이 총선에서 집권 10년차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압승함. 자유당을 승리로 이끈 트뤼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 경력이 짧은 미숙한 후보라는 보수당의 비난을 이기고 선거 막판 과감한 공약으로 판세를 뒤집고 승리함. 보수당 하퍼 정권은 '균형재정' 정책을 고수하면서 캐나다 경제에 비중이 높은 에너지 산업 발전에 집중한 반면,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균형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언하며, 향후 10년간 200억 캐나다달러(약 17조원)를 주택, 보육 시설, 복지시설 건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 트뤼도는 특히,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세금 감면으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캐나다 총선은 보수당 장기집권의 피로도와 중산층 공약에 승부수를 띄운 젊은 리더십이 주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참신한 이미지가 결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 및 선거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정당 및 국회 공약 개발 - 선거제도 및 시민정치 분야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1월 30일(1달 12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20대 총선 대비 공약 개발 - 선거제도, 시민정치 분야
- 연구내용: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 참정권 강화,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사전투표제 확대시행, 정당 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제도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여성 정치의 활성화, 장애인 참정권 보장
- 연구성과: 총선 대응 당 공약으로 활용

주제 : 한국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10일(9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한국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연구
- 연구내용: 10월 18일 정부는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 시안을 발표하고 19일 공청회, 21일에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음. 이번 안에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연령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되었음. 특히, 노후 생활과 관련하여 본인의 노후 생계를 스스로 돌봐야 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60%정도 나타났으며,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은 26%, 마지막 자녀들이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은 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이는 고령사회에 정부나 사회가 노후 생활을 책임 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여전히 낮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정부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안정망에 대한 기대도 높지 않음을 나타냄.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라 각종 노후 관련 시책을 '더 내고 덜 받는'형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층 투표율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일 - 11월 23일(2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청년층 투표율 분석
- 연구내용: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년세대의 늦어지는 '사회진출'시기와 정치효능감을 꼽을 수 있음. 특히, 2,30대 청년들은 낮은 정치효능감을 넘어 삶에 대해 무기력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청년층에 나타나는 저조한 투표율은 청년세대의 무관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청년들의 삶에서 가중되는 불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처방이 부재하다고 진단 할 수 있음.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3주차 정세전망 -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4일 - 11월 19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11월 3주차 프랑스 연쇄테러 관련 여론
- 연구내용: 11월 13일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와 관련하여, 프랑스인의 84%가 테러 방지 위해 검문검색 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프랑스 좌파 정부는 전통적으로 안보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응답자의 대다수가 안전이 보장된다면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 대다수도 IS격퇴에 미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국에서도 테러 우려 집단으로는 북한보다 IS를 더 많이 지목하며, 국제사회가 테러 조직에 군사공격을 할 경우 우리나라가 동참해야 한다는데 '찬성'의견이 64%로 높게 나타났음.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4주차 정세전망 **- 지자체 청년수당 관련 여론**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20일 - 11월 25일(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11월 4주차 지자체 청년수당 관련 여론
- 연구내용: 청년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을 보조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정 금액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청년수당제’ 정책을 두고 지자체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응답은 청년수당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하지만, 청년수당제 정책의 중점 대상인 20대에서는 과반이상이 찬성함. 반면에, 60대에서는 반대가 70%이상으로 나타나 청년수당제 정책이 또 다른 세대갈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국내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2월 3주차 정세전망 **- 미국 대선 여론조사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0일 - 12월 15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12월 3주차 미국 대선 여론조사 분석
- 연구내용: 미국 대선 여론조사서 이민자 출신 테드 크루즈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여론조사의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 크루즈는 트럼프를 크게 앞지름. 이 같이 크루즈의 지지율이 급등한 이유로 크루즈 의원이 쿠바계 이민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 테러리즘 격퇴,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12월 4주차 정세전망 - 안철수 신당 관련 여론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6일 - 12월 21일(6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12월 4주차 안철수 신당 관련 여론 분석
- 연구내용: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 특히 호남지역에서의 민심의 향배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를 분석함. 안철수 신당에 대한 팽팽한 찬반여론과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선불리 ‘일시적 거품’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안철수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향후 2016년 총선에서 야권 다자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연구성과: 국제 정세분석 자료 및 선거 전략 자료로 활용

주제 : 저출산 극복에 실효성 없는 출산장려금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05일 - 01월 08일(0개월 3일)
- 연구분야 : 저출산 극복에 실효성 없는 출산장려금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검토 및 제언

○ 연구내용

-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의 증가에도 출산률과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 감소 등의 정책 방향 검토
-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제언(기존의 가족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결정자들과 일선 관리자, 기업의 고위직 간부들의 인식개선 등)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주제 :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이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30일 - 02월 04일(0개월 6일)
- 연구분야 :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건, 정부 정책 프레임 전면 전환을 위한 검토

○ 연구내용

- 아동폭력 사건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 검토
- 보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신뢰회복, CCTV 설치에 있어 설치가이드 마련이 선행, 전담 지원체계필요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 연구기간 : 2015년 04월 9일 - 04월 10일(0개월 2일)
- 연구분야 :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이후 내용검토와 법적 과제 마련
- 연구내용
 -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성노동을 주장하는 성매매 당사자들과 페미니스트의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대응 마련
 - 국가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던 역사적 과정,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성매매로 해결 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처지, 성매매가 급증하게 된 환경적 요인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지원과 성매매 예방프로그램의 미비, 알선업자에 처벌 등이 논의되어야 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연구기간 : 2015년 05월 10일 - 05월 14일(0개월 5일)
- 연구분야 : 남성의 육아휴직,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필요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남성의 육아휴직 현황과 실질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검토
- 연구내용
 - 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개정안 내용 검토 및 현 육아보장제도 검토
 - 한국에서는 실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용기간과 대상 확대 및 이 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및 재원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주제 :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양성평등기본법」시행 예정

- 연구기간 : 2015년 06월 08일 - 06월 11일(0개월 4일)
- 연구분야 : 여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양성평등기본법」시행 예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 검토 및 정책개선 과제 도출

○ 연구내용

-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후, 10여년이 지난 2014년 4월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안이 의결되어 내용 검토 및 정책개선 과제 도출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정책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의의가 있으나 이 법의 한계로 성평등을 양성의 문제로만 인식한다는 점,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성역할을 고착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주요 정책과제가 사회적 소수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건강권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임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주제 :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 연구기간 : 2015년 06월 23일 - 06월 25일(0개월 3일)
- 연구분야 :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성소수자 운동 가시화, 동성간 결합을 둘러싼 제도 논의와 이후 법제도 정비를 위한 내용 검토

○ 연구내용

-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로 난항을 겪던 퀴어퍼레이드가 법원 결정으로 서울광장에서 예정대로 개최되었고, 당 차원에서 파트너십과 동성혼에 대한 각국의 제도적 상황과 입장, 제도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전략을 다룬바 있음.
- 가족제도에서 남녀의 혼인만을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의 중간단계로서 동성결합 파트너십이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동성혼이 최종목적지가 아닌 만큼 기존의 혼인제도에서 벗어난 형태의 가족제도가 필요함.

○ 연구성과

- 분야별 이슈&정세분석 전망 보고서로 제출, 당 정책 방향에 반영

주제 : 대통령 인사권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02일 - 01월 10일(0개월 9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2015년 초 대통령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검찰수사가 있었음. 이에 문제가 됐던 대통령 인사권 및 비서실 권한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제언을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그리고 대통령의 법적 인사권 및 대통령 비서실의 법적 존재이유를 바탕으로 현안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① 비서실 권한 축소, ②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③ 각 부처에 분산된 장관의 인사권을 중앙인사기구가 담당토록 함

○ 연구성과

대통령의 인사권 및 비서실 체계에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직윤리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15일 - 01월 23일(0개월 9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이 약 3년간의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정무위 안’으로 1월 12일 정무위를 통과했음. 이에 그동안 당이 추진했던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과 이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김영란 법’의 입법쟁점을 분석함. 나아가 당의 기존입장이었던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분석함. 이를 위해 고위직 및 기득권에 대한 철저한 적용이 전제될 것, 또한 일반국민들도 본 법에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동 법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상담센터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연구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 개정에 관한 당의 입장 정립을 위해 이론적 관점에서 제언하고 이를 활용토록 함.

주제 : 공무원 윤리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26일 - 02월 05일(0개월 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이른바 ‘김영란 법’이 제정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 골프금지령을 해제하는 등 역방향을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이른바 ‘김영란 법’의 제정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동시에 공직 및 공무원 윤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검토함. 나아가 관련 이해관계 단체 및 시민단체의 입장을 검토하고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 무엇보다 향후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동시에 도입되어야 함을 제언

○ 연구성과

공직 윤리 및 김영란법 제정에 관련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정부의 재벌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01일 - 03월 12일(1개월 12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정부 재벌정책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국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요구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이것이 실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함. 그 결과 2013년 3월 이후 2015년 2월 말까지 전경련이 건의한 정책과제수가 약 882개였으며 그 중 상당수가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제개혁의 방향이 전경련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성과

박근혜 정부의 재벌 정책을 친재벌 정책이라는 비판의 방식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전경련이 무엇을 요구했고 이 중 분야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됐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당의 정책 대응이 보다 구체적일 수 있도록 제언.

주제 :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11일 - 03월 12일(1개월 2일)
- 연구분야 : 국회 운영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비정규직 문제가 급속하게 악화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돼 왔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수행함.

○ 연구내용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4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더욱이 임금격차 역시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정부정책은 일자리 창출정책과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고용보험 개혁 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및 인적투자 정책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 연구성과

향후 당의 비정규직 대책을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 제시

주제 : 정부 국정운영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17일 - 02월 27일(0개월 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당의 대응방향에 제언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박근혜 정부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2년간의 업적을 평가함. 먼저 인사정책의 경우 인사청문회, 김영란 법 제정, 공무원 연금개혁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을 분석함. 끝으로 규제개혁을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것이 개혁보다는 사실상 완화정책이었음을 보여줌.

○ 연구성과

박근혜 정부 지난 2년은 인사, 조직, 규제정책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에 관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무원 부패방지

- 연구기간 : 2015년 03월 01일 - 03월 13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공직사회의 청렴과 공무원 부패를 방지하고자 제정하고자 한 ‘김영란 법’이 통과됨. 그러나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법적 완결성이 떨어짐. 이에 향후 당의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이른바 ‘김영란 법’ 통과 이후 정치권 및 각계 반응을 분석함. 이후 김영란 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 무엇보다 이해충돌방지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연구성과

‘김영란 법’을 둘러싼 개정 의견에 대한 대응 및 향후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을 위한 당의 입장에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무원 연금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03월 14일 - 03월 27일(0개월 1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부 공식안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의 입장에 반영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설치된 국민대타협 기구의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분석함. 한편 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적이고 공직 내 경쟁을 심화시키는 제도의 추진 방향을 분석함.

○ 연구성과

공무원연금 개혁 및 인사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국민안전처 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04월 01일 - 04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입장과 국민안전처 인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분석하고, 관련 참가 부처 및 재원을 분석함.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세부예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국민안전처 내부의 인사문제를 살펴봄. 이를 위해 개방직 임용직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민안전처 내부의 전문직 고위관료양성 방안을 제언함.

○ 연구성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국민안전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당의 입장에 반영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공공기관 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04월 13일 - 04월 30일(0개월 18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가 '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입장에 제언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정부의 '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실제로 일부사업 민영화 및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실제 세부내용을 분석함. 이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함.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위해 업무의 공공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이해관계집단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연구성과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의 입장 및 향후 구체적 법제도 개선에 이론적 근거로 활용.

주제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상호관계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05월 05일 - 08월 20일(3개월 16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야권은 대체로 공적연금 강화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음. 하지만 국민연금 강화가 노동시장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인, 즉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연금체계로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감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국민들이 구조적으로 양산되고 있음을 분석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장이력과 상관없이 제공되는 보편복지적 기초연금이 대안임을 강조.

○ 연구성과

향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추상적인 지지를 넘어서, 같은 공적연금이라도 그 제도적 특성이 다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당에 보고함.

주제 : 공적연금체계개편

- 연구기간 : 2015년 05월 18일 - 05월 29일(0개월 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회 내 사회적 기구 구성으로 합의되면서 국민연금까지 확장되어 논의됨에 따라, 직역연금 전반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연금 체계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기존 공무원연금 논의가 공적연금 강화논의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 각 이해집단의 입장을 분석함. 무엇보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노동시장 양극화 및 직업 불안전성, 청년 실업 등에 대안이 되지 못함을 분석하고 이보다는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함.

○ 연구성과

공무원 연금에 대한 논쟁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연금을 넘어 포괄적 다층체계 공적연금으로 전환 제시

주제 : 국가 위기관리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06월 01일 - 06월 12일(0개월 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이 다시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전체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대통령의 병원공개 지시를 둘러싸고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 장관까지의 명령체계에 대한 혼선과정 및 원인을 분석함. 무엇보다 대통령의 병원공개 지시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향후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인사제도 전면개편을 제안.

○ 연구성과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체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향후 관료 전문성 및 컨트롤 타워를 통한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방안을 당에 제시함.

주제 : 국민안전처 조직위상

- 연구기간 : 2015년 06월 14일 - 06월 26일(0개월 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 위기관리 핵심 정부조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위기관리 대응에서 국민안전처의 모호한 역할 및 권한을 분석함. 무엇보다 국민안전처가 핵심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위기에 따른 관할부처 및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TF 중심으로 대응체계가 구성되어 위기관리의 혼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을 분석. 사실상 소방과 해경만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재함을 지적.

○ 연구성과

위기관리에서 국민안전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재점검하고 향후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여 당에 제출함.

주제 : 복지국가 개혁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07월 01일 - 09월 04일(2개월 4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향후 당의 복지국가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체계의 성격과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우리나라의 기존 복지체계를 기업중심 복지체계로 명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 나아가 이러한 기존의 제도가 변화하는 국제경제 및 노동시장에 상호조응하지 못함을 밝히고, 향후 국가 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을 논증함. 또한 이것이 곧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인적투자방안 나아가 경제성장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함.

○ 연구성과

기존의 경제성장론을 뛰어넘어, 국가중심으로의 복지체계의 개혁이 국민 삶의 안정성과 인적투자, 그리고 경제성장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당에 보고하여 향후 장기적인 당의 입장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함.

주제 : 국민연금 기금운용

- 연구기간 : 2015년 08월 14일 - 08월 28일(0개월 1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본 공사화 정책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 정부 안대로 추진할 경우 사실상 전면적 금융조직화로의 개편을 의미할 수 있음을 강조함.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

○ 연구성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단순히 수익을 위해 금융 차원에서만 다룰수 없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금융투자자와 다른 방식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함을 당에 제언함.

주제 :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 연구기간 : 2015년 09월 01일 - 09월 11일(0개월 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 이어 돌고래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였지만, 사고 대응과정에서 다시금 국민안전처의 초동대응이 실패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메르스, 돌고래 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함. 무엇보다 돌고래호 사건은 메르스 사태와 달리 해양사고로서 해경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 소관 사건이었음. 문제의 원인을 평시, 사고 발생시, 사고 후로 나누어 분석함.

○ 연구성과

메르스 사태와 달리 해양사고에서 다시금 무능을 드러낸 국민안전처의 위기관리 대응을 분석하고, 특히 해양사고 대응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개혁방안을 모색하여 당의 입장에 반영토록 함.

주제 :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개혁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01일 - 10월 16일(0개월 1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계기로 설치된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뚜렷한 결과 없이 종료를 앞둔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개혁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국회 내 공적연금강화 특위의 쟁점을 분석하고 공적연금 논의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및 사보험 개혁방안을 분석함. 무엇보다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뒤로 한 채 사보험 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전반 연금제도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함.

○ 연구성과

공적연금 특위 및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퇴직연금 및 사보험 시장에서의 정부 정책을 같이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방안을 당에 제언함.

주제 : 정부 내 테스크포스(TF) 조직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8일 - 10월 29일(0개월 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테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하고 국정화 대국민 선전전을 펼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연구내용

정부 내 TF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 TF 참여자들은 각기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해를 회의에서 대변하거나 피드백하는 역할임. 하지만, 이번 교육부가 설치한 TF는 그 설치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할지라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대국민 홍보를 수행한 것의 문제를 지적함.

○ 연구성과

교육부 TF설치가 TF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에 보고함

주제 : 중앙정부-지방정부 업무 갈등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08일 - 11월 20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항의함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 업무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수당 예산을 책정함에 따라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복지정책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임을, 고용노동부는 중앙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된 사업임을 주장함.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업성격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업무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함을 강조함.

○ 연구성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문제제기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방해가 아니라 타당한 이의제기의 측면이 있음을 당에 보고함.

주제 : 대통령 시행령과 입법사안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05일 - 12월 17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정부가 기존에 시행령으로 존재했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입법사안으로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논쟁이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내용

국제적으로 테러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존에 시행령으로 존재했던 대테러대응 체계를 입법사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함.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콘트롤 타워를 사실상 국정원으로 설정하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적절함을 역설함.

○ 연구성과

정부의 대테러입법에 결함은 있지만, 대통령 시행령으로 대테러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콘트롤타워에서의 대안이 중요함을 당에 보고함.

주제 : 1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정치메세지와 개헌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1월 7일 - 1월 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월 1-2주차 정치현황 및 정치대응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이뤄졌음. 합의안은 세월호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 1월 12일(월)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됨. 박근혜 대통령, 1월 12일(월) 신년 기자회견 예정.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원외위원장 놓고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갈등, 비박-친박 갈등 고조.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전 치뤄진 1월 7일(수) 컷오프에서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이인영 의원이 통과하였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월 4~5주차 정치정세전망-연말정산 후폭풍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강타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0일 - 1월 2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임시회 2월 2일 개회 예정. 2월 3일(화) 교섭단체 대표연설(양당 원내대표), 2월 10일(화)~13일(금)까지 대정부질문(4일간), 2월 26일(목), 3월 3일(화) 본회의 예정. 연말정산 후폭풍 정국 강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저인 30%대 초반대로 폭락. 박근혜 대통령, 지난 13일(화)부터 22일(목)까지 17부5처5위원회1청의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신년 업무보고 받았음. 새누리당, 당청 갈등, 친박-비박 갈등 격화.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앞두고 순회토론회 진행. 문재인 의원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앞서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양당제의 뒷, 대통령의 추락과 존재감 없는 제1야당의 부상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2일 - 1월 29일(3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및 이슈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존재감 없는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자기 혁신의 정치과정 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정치적 결과 이면에 양당제가 자리함. 지난 60년 동안 한국정치에서 양당제는 정치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문화시킨 주범. 또한 별 다른 사회적 대안없이 사소한 문제를 격렬한 정쟁의 대상으로 부상시키며 ‘허약한 아젠다와 이슈’를 양산한 주범임. 나아가 양당제는 다양한 사람들을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가로막아 대의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질식시키는 주범임. 양당제를 극복하지 않고 좋은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2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여전히 당청 관계에서 새누리당 무시 전략 일관

□ 연구기간 : 2015년 2월 3일 - 2월 5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 2월 1-2주차 정치정세 현황 및 대응 ○ 연구내용 : 국회 임시회 2월 2일(월) 개회. 2월 25일(수)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25일(수)~27일(금)까지 대정부질문(3일간), 3월 3일(화) 안건 처리 본회의 예정.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불능의 통치 위기 직면, 이를 돌파 위해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 후보로 지명.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비박계 유승민 의원 선출. 김무성-유승민 지도부 체제로 본격적인 청와대 견제.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앞두고 갈등 격화.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없이 기존 정치행태인 계파 투쟁으로 ‘동네 축구’ 보다 못한 전당대회 진행 중.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3월 2~3주차 정치 정세전망- 미대사 테러, 종북논란과 재보선 정국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0일 - 3월 1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3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국회 4월 임시회를 앞두고 휴회. 지난 3일 10일(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4월 국회에서 ▲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보완 우선 처리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 실질적인 협의 진행 및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협력 ▲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동시 처리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하고 첫 회의 개최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지속 등을 합의. 리퍼트 주한 미대사에 대한 테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공세적 국면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권에게는 수세적 국면으로 작용. 새누리당은 테러 사건을 재보선까지 끌고 갈 전망.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사드 배치 논란과 기로에 선 한국 외교전략

□ 연구기간 : 2015년 3월 12일 - 3월 19일(7일)

□ 연구분야 : 외교통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세분석, 사드 배치 찬성론 비판 및 대안 모색

○ 연구내용 :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입장을 넘어 세밀한 정세 파악과 전략적 판단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상황.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선택과 관련하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외교적 선택이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고 국익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라, 무지와 무능으로 포장한 재앙일 뿐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3월 4~5주차 정치 정세전망- 무능한정치가 불러온 국민불행시대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4일 - 3월 26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3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세계 최악의 자살율, 노인빈곤율, 극단적인 양극화, 희망없는 청년세대 등 세기말을 보는 듯한 한국사회의 모습은 이를 해결할 정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자, 보수독점 정치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보여주는 것임. 현재 한국정치는 정치가 국민의 삶과 괴리되어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논란에 골몰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재앙 상태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정의당 정치개혁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5일 - 4월 1일(7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당 선거구 획정 대응 정치개혁 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정의당의 정치개혁안-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② 국회의 총 비용 동결 속에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 ③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기자가 본 정의당

- 연구기간 : 2015년 3월 26일 - 7월 24일(1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기자들의 정의당에 대한 제언을 통해 당 발전 방향 모색
- 연구내용 : 진보정의연구소는 정의당의 정치전략 수립과 전략과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략구상세미나를 진행. <기자가 본 정의당>은 이러한 전략구상세미나의 세부기획으로 준비되었음. 특히 대한민국의 이슈와 의제를 현장에서 다루는 기자라는 특수한 위상과 관점에서 정의당이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받는지를 아는 것은 정의당이 현재 직면한 당의 현실과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함. 전략 세미나 발표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당원 교육 자료로 활용

주제 : 4월 1~3주차 정치 정세전망

-4.29 재보궐 선거

□ 연구기간 : 2015년 4월 7일 - 4월 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월 1~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4.29 재보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곳의 재보궐 지역구의 대진표가 확정되었으며 정당 및 출마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표밭 다지기에 돌입. 일여다야의 재보궐 선거 구도상 4개 지역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로 보면,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광주 서울을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 특히 문재인 대표의 경우, 재보궐 성패 여부에 따라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차이로 1위로 달리고 있는 현재 위상을 지속하느냐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국회의원 360명 확대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4월 13일 - 4월 22일(9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의원 정수 360명 확대 방안
- 연구내용 :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 극렬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방지, 사회적 대표성 확보, 소수자 발언권 확보를 위해, 대의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필수. 현재 국회의원 세비 절감 삭감, 의원실 보좌진 축소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의원 정수 확대 재원으로 사용. 또한 입법지원 체계 강화하는데도 사용.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대통령의 적반하장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3일 - 4월 30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임기 후반 국정을 이끌며 갈 두 개의 카드 중 하나는 정권마다 활용했던 사정정국이 정권 실세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귀결되는 자살골로 이어지며 무력화. 다른 하나 남은 대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색 될대로 경색된 대북관계가 정부여당의 계산대로 단기간에 풀릴지 의문. 최근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후과는 자명.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적반하장이 잠시 소나기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장마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몇 번 국민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4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성완종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8일 - 4월 30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4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4·29 재보궐 선거로 4월 임시국회는 여야대치 속에 별무소득없이 진행되었음. 세월호 시행령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공방 진행. 다만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4·29 재보궐 선거 결과 새누리당 압승, 야권 전패, 천정배 당선. 새누리당은 서울관악을 오신환 후보, 경기성남중원에서 신석진 후보, 인천서강화을에서 안상수 후보가 각각 당선, 광주서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후보가 당선하였음. 성완종 리스트라는 여당에게는 악재, 야당에게는 호재의 변수가 나왔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및 선거 대응 전략 실패로 전패. 새누리당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전방위적 물타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병상 중 호소가 지지결집과 선거 승리로 이어졌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5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재보궐 선거 후폭풍, 청와대 정국주도력 확대

- 연구기간 : 2015년 5월 12일 - 5월 1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5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압승을 기반으로 한 집권여당의 정국주도력이 탄력을 받고 있음.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며, 여야를 떠나 국회 전체를 압박하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연금 공포 마케팅이 국민여론에 호응을 받으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국면. 리얼미터 5월 1주차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서 2015년 들어 최고치인 44.2%를 기록.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1~2주차 정치정세전망-박근혜 대통령 정국주도력 강화

- 연구기간 : 2015년 5월 27일 - 5월 2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1-2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주도력이 재보궐 이후 한층 강화되었음. 당에 대한 청와대 우위 지속. 황교안 총리후보 지명은 사정 정국을 지속하며 당분간 정부의 정치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정드라이브'를 집권 중반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궐 완패로 친노와 반대진영의 대립 격화되었다가 소강 상태.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임명. 김상곤 위원장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난마처럼 얽힌 계파의 이해관계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 진보세력은 재보궐 선거로 중단되었던 진보재편 재추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메르스 공포 넘어서기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6월 15일(7일)
- 연구분야 : 보건복지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메르스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은 경제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 해야 할 국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메르스에 따른 경기 위축을 ‘경제 살리기’의 대국민 심리전으로 어설피게 대체하여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게 아니라, 메르스의 완전한 종식만이 진정 경제에 도움되는 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메르스 종식에 모든 정책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해야 할 것임. 또한 메르스 사태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극빈층, 청년, 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메르스 차단.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와 의심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지역별 대규모 의료 격리시설을 확보하여 메르스의 지역전파를 막아야 함. 또한 메르스 발병 병원과 감염 경로, 발생 지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를 낮추고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6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메르스 전염 확산, 공포에 빠진 대한민국

□ 연구기간 : 2015년 6월 10일 - 6월 12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중동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전염되면서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 공포에 빠졌음. 메르스 내습은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와 재벌 병원의 월권, 초동 대응의 실패로 확산일로에 있음. 11일(목) 현재, 메르스 사망자 11명, 13명 위중, 확진자가 이미 100명을 넘어섰고 격리대상자가 4000명에 육박.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황후보자의 심각한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공포'로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예비내각제 현실 가능 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6월 8일 - 8월 25일(78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예비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사례, 예비내각제 현실 가능 방안 탐색
- 연구내용 : 예비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해외사례에서 드러난 차별성 점검, 한국정치에서 각 정당의 예비내각제 경험에 대해 살펴봄. 이를 통해 한국 사례에서 예비내각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예비내각제 현실적 활용 방안을 제시
- 연구성과 : 당의 예비내각제 이해 확대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

주제: 6월4~5주차 정치정세전망-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 경색

□ 연구기간 : 2015년 6월 24일 - 6월 26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6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본회의가 6월 25일(목), 7월 1일(수)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법, 정치관계법, 메르스 대책 등 주요 쟁점. 국회법은 정의화 의장이 중재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파행으로 이어짐. 이것은 국회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자, 국회의 입법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임. 야당들 강하게 반발.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함.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의제 자체를 회피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7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 연구기간 : 2015년 7월 22일 - 7월 2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7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따른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였음. 7월 8일(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결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여 사퇴하였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단순한 법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이를 넘어 대통령의 정치 수단으로서 새누리당 갈라치기, 비박계에 대한 공세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라는 결과로 나타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의 치욕'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는 친박-비박의 내년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지역선거구 획정 대응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5일 - 9월 1일(7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술 자료, 지역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역의 대응 방향
- 연구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 지역위원회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 진술 자료. 현재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기준 하에 ‘지역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인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실상의 선거제도 개악일 뿐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 8월 5주~9월 1주차 정치정 세전망-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확대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6일 - 8월 28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15년 8월 5주~9월 1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DMZ내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과 이에 따른 철책 순찰 중이던 우리 국군 2명 중상,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계, 이후 남북한의 포격 주고 받기로 지난 몇 일간 남북관계는 촌각을 다투며 악화일로, 전면전의 위기에 직면. 그러다가 지난 8월 22일(토) 북한의 전격적인 고위급 회담 제의로 무박 4일의 회담을 진행하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음. 합의문은 남북경색 국면 해소를 위한 자극 행위 금지, 당국자 회담, 이산가족상봉, 교류 등이 망라되었음. 이번 급격한 남북경색 및 화해 국면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임. 박근혜 대통령은 7월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국정지지도 30% 초반대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번 남북대치 국면을 맞으면서 40% 초반대 국정지지도로 상승. 또 다시 급속한 남북대치 국면 후 급격한 남북화해 국면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을 확대, 강화하고 날개를 달아준 상황.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2~3주차 정치정세전망-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력 강화 일로

- 연구기간 : 2015년 9월 8일 - 9월 10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월 2-3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박근혜 대통령은 냉탕과 온탕을 오간 남북의 대치 국면의 급격한 완화, 이어서 중국 항일 전승절 참석, DMZ 지뢰 피해 장병 방문, 지역 박람회 참석 등 민생 행보를 통해 국정지지율을 50% 이상 끌어올렸음. 올해 들어 최고의 국정지지율을 기록. 당분간 박근혜 대통령의 강세는 별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될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정국 주도력이 강화될 수록 반대로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의 상대적 우위 속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축소되고 있음. 당장 새누리당 분위기는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에 대한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리라는 예상이 분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가치와 의미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4일 - 9월 21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각 당에서 지도부의 공천 기득권을 내려 놓으면, 국회의원 공천을 투명하게 진행할 방법은 존재. 그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상식을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 즉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물론 여기에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를 일정부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지도부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가 가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임. 비례대표 순위 명부를 당원과 유권자에게 개방하여 당선자 결정을 당원의 직접선거 50%와 유권자의 비례명부 후보에 대한 투표 50%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혼합형 비례명부를 작성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밀실 공천은 크게 개선될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우리 정치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양당의 기득권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다양한 요구에 친화적인 다원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한국 비례대표제 변천과 의미

- 연구기간 : 2015년 9월 16일 - 9월 23일(7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천과정과 정치적 효과 분석
- 연구내용 : 비례대표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어 몇 번의 축소 확대 과정을 거친 제도. 비례대표제가 한국정치에서 갖는 장점은 ①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를 방지하고 보완하여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투표에 반영, 투표 가치의 등가성 문제를 보완 ② 계층, 직능 대표성의 반영으로 의회 전문성 향상 ③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회세력의 이해와 요구 대표 ④ 고질적인 지역주의 완화 ⑤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활성화로 정당 간 정치경쟁을 확대하여 정치의 질을 높임.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 ⑥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 ⑦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불신을 넘어 정치 효능감과 신뢰 강화
- 연구성과 : 당 대응 자료로 활용

주제 : 9월 4-5주차 정치 정세전망-양당 모두 총선 주도권 둘러싼 내분 심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2일 - 9월 24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9월 4-5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둘러싸고 친박-비박 정면충돌. 김무성 고립심화, 9월 30일(수) 의총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시행 여부 최종 정리될 듯. 새정치민주연합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 박주선 탈당으로 어수선한 상황. 더구나 혁신위에서 마지막으로 부패연루자 공천 배제, 당 전현직 지도부 힘지출마 요구. 이는 안철수 의원, 박지원 의원 등 비주류의 반발을 초래하며 당의 원심력을 확대하고 있음. 분열 가능성도 상승 중.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0월 3~4주차 정치 정세전망-역사

교과서 국정화 쟁점, 새누리당의 쟁법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4일 - 10월 16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집권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뺏다방’은 몇 가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대표, 친박-비박 사이의 20대 총선 공천률을 둘러싼 대립 격화와 이에 따른 새누리당 내분의 위기 증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갈등’으로 전환하여 내분을 완화하는 것. 다른 하나는 경제지표 악화,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 개혁 이슈 등 쟁점 이슈의 부각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국주도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이를 넘어서는 ‘국정화’ 문제를 부각시켜 이슈를 재배열하고 집권여당의 정국주도력을 4월까지 지속시키는 것임. 마지막으로 극단적 이념 균열을 동원한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새누리당 지지 세력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양분하는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정당 및 국회 개혁 공약 개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1월 20일(30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20대 총선 대비 정당, 국회 개혁 공약 개발
- 연구내용 : 국회 교섭단체 제도 폐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시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국회의원 겸직금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 강화,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 신설, 지구당 복원,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당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전환, 정당 후원회 설치 허용, 모든 정치자금 수입·지출 인터넷 상시 공개
- 연구성과 : 총선 대응 당 공약으로 활용

주제 : 2015년 10월 5주차~11월 1주차

정치정세-역사교과서 전쟁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27일 - 10월 29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0월 5주차-11월 1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향후 전망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하나는 반대여론이 점증하는 상황의 경우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새누리당에게는 국정화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여 수도권 중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음. 다른 하나는 찬성여론의 점증이나 반대여론이 하향 정체될 경우, 야권은 국정화 이슈의 희생물이 되어 더욱 약화되거나 내부 분열이 촉진될 가능성이 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를 다시 이념, 가치, 세대, 지역으로 분열을 촉진하는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 또한 국정화 이슈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국민들의 삶의 문제, 민생문제를 정치로 부터 배제시키고 있음.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문제를 반대세력과 정면대결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자체가 정쟁의 근원이 되고 있음. 비루한 정치, 협소한 정치논쟁이 일상화 되고 있음.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1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역사교과서 국정화 전쟁 여진 계속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8일 - 11월 20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1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문제의 이념대립 구도의 강화는 한편으로 정국을 대통령이 주도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새누리당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지향은 정당정치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해악이 되고 있음. 대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정당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정당이 대의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언론이 막힌다는 것임. 이는 정당정치를 식물정치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소수의 사람이 정치를 지배하는 폐쇄적 과두정치의 일상화로 그 폐해는 그대로 국민들의 삶과 생활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12월 3~4주차 정치정세전망-새정치 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탈당과 영향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5일 - 12월 17일(3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12월 3~4주차 국회, 대통령, 정당 등 정치정세 분석
- 연구내용 : 안철수 의원이 12월 13일(일) 전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였음. 일부 여론조사에서 제3당으로 올라서고 수도권에서 3자 경쟁구도 형성의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분열로 인해 20대 총선에서 야권은 '3자 필패'의 부정적 결과만 예상.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무능한 정치 넘어서기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22일 - 12월 29일(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정세 분석 및 대응

○ 연구내용 : 통치자와 정당, 정치인은 모름지기 국민들의 ‘자기 살길 찾기’를 귀담아 듣고 조정과 타협을 통해 ‘살길’을 마련해 주는 가장 조직된 집단. 그러나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자기 살길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정치 상황은 정치가 아닌 투기판에 지나지 않음. 이런 무능한 정치가 불러온 국민의 살림살이의 위기와 붕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위정자들이 내세우는 창조경제니, 통일대박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하는 말만 그럴듯한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비루하고 의미없는 말들의 나열일 뿐. 그러나 정치가 국민들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 해법임. 2016년 4월 13일 개인적, 정치적, 사회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변화의 원천인 ‘정치의 변화’를 위한 한표를 행사해야 할 것임. 투표율 재고를 위한 방안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연구성과 :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주제 :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02일 - 01월 21일(0개월 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평등선거,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고 개정방향을 마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구체화.
- 연구내용
 - 선거구 획정제도의 개선방안(외국사례, 획정기구의 독립기구화 및 위원 구성 방안 등)
 - 선거권, 피선거권의 확대방안(투표시간, 후보자 기탁금 제도, 선거권 연령 등)
 - 비례대표제도 개선방안(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설계 등)
- 연구성과
 -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 현황과 전망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02일 - 01월 08일(0개월 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행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
-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제 현황 분석
 - 외국의 생활임금제 사례
 - 생활임금제도의 개선방안
- 연구성과
 - 생활임금제 관련 당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정치인 출판기념회 규제 등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01월 22일 - 01월 31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행위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 연구내용
 -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의 문제점
 - 출판기념회 수입에 대한 선관위 보고 법제화 방안
- 연구성과
 - 정의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방안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월 25일 - 2월 05일(0개월 1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방안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마련
- 연구내용
 - 지방교부세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지방재정에 대한 진보적 대안 제시
- 연구성과
 -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스웨덴 선거제도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01일 - 02월 1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례대표제를 실시중인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의석배정방식 연구를 통해 한국의 도입 가능성 분석
- 연구내용
 - 스웨덴의 개방형 완전비례대표제 연구
 - 보정의석 제도 등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성과
 - 정의당 선거제도 개정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박근혜 정부 2년 지방자치 정책 평가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21일 - 02월 27일(0개월 0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박근혜 정부 2년을 맞아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재정 악화 등 지방자치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
- 연구내용
 -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
 - 지방재정 확충 공약 후퇴 사례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문제점
- 연구성과
 -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정책브리핑에 반영

주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24일 - 02월 25일(0개월 0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제시
- 연구내용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실현방안
 - 지역구-비례대표 동시입후보제(석패율제)의 문제점
 -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방안
- 연구성과
 - 정의당 정치특별위원회 입장으로 발표
 -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실현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25일 - 03월 02일(0개월 0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마련
- 연구내용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 석패율제의 문제점
 - 의원정수의 확대방안
- 연구성과
 - 중앙선관위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토론문으로 활용
 - 정의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누리과정 땀질식 합의 문제점과 보육대란 해결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03월 02일 - 03월 10일(0개월 09일)
- 연구분야 : 교육문화체육관광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갈등 해결방안 마련
- 연구내용
 -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땀질식 합의 이후 여야간 논의양상
 -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 문제점
 - 누리과정 국고책임제 실시방안
- 연구성과
 - 정책논평 등을 통해 누리과정에 대한 정의당의 기본입장으로 제출

주제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점과 대응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03월 02일 - 03월 12일(0개월 1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
- 연구내용
 - 경상남도, 경남교육청, 경남도의회, 경남 시민사회의 무상급식 관련 논의 경과
 - 무상급식 중단의 문제점
 - 정의당의 대응방안
- 연구성과
 -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에 반영

주제 : 석패율제 검토

- 연구기간 : 2015년 03월 03일 - 03월 12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석패율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분석과 정의당의 석패율제에 대한 입장 도출
- 연구내용
 - 석패율제 도입 관련 기간 논의 경과 연구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석패율제의 당선인 결정방식과 문제점 분석
 - 정의당이 검토해야 할 지점 제시
- 연구성과
 - 석패율제 관련 당의 입장 정리

주제 : 공정위의 경쟁제한적 자치 법규 폐지 요구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03월 21일 - 03월 26일(0개월 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자치입법권의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공정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의 문제점
 -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반응
 - 정의당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공정위의 부당한 조례 폐지 요구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 정리

주제 :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제도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04월 20일 - 04월 29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역 의원과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방안 연구

○ 연구내용

- 현행 선거구 획정제도의 문제점 분석
- 외국의 선거구 획정제도 비교
- 선거구 획정기구 독립화 및 공정한 위원 구성방안 마련

○ 연구성과

-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2015년도 지방재정 현황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04월 21일 - 04월 30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통해 나타난 지방재정 현황을 분석해 당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 연구내용
 - 통합재정개요에 나타난 지방재정 주요 지표 분석(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인건비 비율, 지방세수 등)
 -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의 문제점
 - 정의당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지방재정 관련 당원용 기초자료로 제공

주제 :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방안

- 연구기간 : 2015년 05월 02일 - 05월 14일(0개월 1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국회 논의상황을 정리하고 정의당의 대안을 마련 ○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관련 논의 현황-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관련 논의 경과-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 정책보좌인력 확대 방안 ○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의회 보좌인력 관련 당의 기본입장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판단 근거 마련

주제 :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퇴시기 제한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05월 22일 - 05월 26일(0개월 5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퇴시기를 법을 제한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
- 연구내용
 - 후보자 사퇴시기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 후보자 사퇴 제한 관련 외국 사례 분석
 - 선거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사퇴시기 제한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과 지방의회역의 역할

- 연구기간 : 2015년 06월 01일 - 06월 22일(0개월 22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 연구내용
 - 현행 지방선거제도 문제점
 - 지방선거제도 개선방향
 -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 연구성과
 - 지방선거제도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당의 기본입장 정리

주제 : 긴급재정관리제도 문제점과 지방재정 위기 해법

- 연구기간 : 2015년 07월 02일 - 07월 22일(0개월 2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지방재정 위기 해법 모색○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재정관리제도 주요 내용 및 기존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의 차이점- 지방재정 위기 원인 분석-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논평 등을 통해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정의당의 기본입장으로 제출

주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뮬레이션

- 연구기간 : 2015년 08월 01일 - 08월 30일(0개월 3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 분석 ○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전국단위/권역별,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분포 모형 도출- 중앙선관위안, 정의당안 등 각 선거제도 개혁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 현 정당지지도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비례대표제의 올바른 이해

- 연구기간 : 2015년 08월 01일 - 08월 24일(0개월 2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다수제와의 차이, 병립형과 연동형의 의미 등 비례대표제의 본래 의미를 분석
- 연구내용
 - 비례제와 다수제의 차이
 - 연동형과 병립형의 차이
 - 권역별 병립제의 문제점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 당내 교육자료 및 국회 출입기자 대상 설명자료로 제공

주제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견

- 연구기간 : 2015년 08월 01일 - 08월 31일(0개월 31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의당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입장 정리
- 연구내용
 - 적정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 선거구 획정 원칙과 기준
 - 농어촌 지역대표성 보완책
- 연구성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정의당 의견진술 자료로 활용

주제 :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08월 03일 - 08월 22일(0개월 2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분석
 - 권역별 병립형 도입시 시뮬레이션 분석
 - 소수정당이 배분 받는 비례의석수 변화 분석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09월 02일 - 09월 11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단일화하려는 정부 입장의 문제점 지적
- 연구내용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논의 경과
 - 정부의 지방세 관련 법 개정 움직임
 - 정의당의 대안 모색
- 연구성과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관련 당의 기본입장 정리 및 당 소속 국회의원의 판단근거 마련

주제 :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목표는 2016 예산안

- 연구기간 : 2015년 09월 08일 - 09월 10일(0개월 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예산안에 나타난 지방재정 전망과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안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관련 2016년 예산안 분석-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계획 문제점- 누리과정 관련 전망- 정의당의 대안 모색○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예산안 관련 기본입장 정리

주제 :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09월 21일 - 09월 24일(0개월 4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지침의 문제점 및 지방자치,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지침 주요 내용- 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미치는 영향- 정의당의 대응방안○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과 관련한 당의 기본입장 정리

주제 :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점

- 연구기간 : 2015년 09월 28일 - 09월 30일(0개월 03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경선 및 선거여론조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문제점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측면 및 정치제도 측면 문제점
 - 당의 대응방안 제시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정당 후원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의미와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23일 - 12월 28일(0개월 06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3헌바168)에 따른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마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내용- 정당 후원회 금지의 문제점- 정치자금법 개정방향○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의당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자치 분야 정책공약 개발 방향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5일 - 12월 14일(2개월 0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 분야 총선공약 개발 방향 마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분야 정책공약 개발 방향- 지방분권 관련 정책공약 개발 방향- 지방자치 활성화 관련 정책공약 개발 방향- 주민참여 확대 관련 정책공약 개발 방향○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 총선공약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지방재정 악화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문제점 긴급재정관리제도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30일 - 12월 09일(0개월 10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방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진보적, 주민참여적 해법 마련○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지방자치 침해,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자치 확대 측면)-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대안 모색○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논평 및 본회의 반대발언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석패율제 도입 논의 비판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01일 - 12월 07일(0개월 07일)
- 연구분야 : 안전행정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일본식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분석
- 연구내용
 - 석패율제의 정의
 - 석패율제 논의경과
 - 석패율제 도입주장 근거
 - 석패율제의 유형
 - 중앙선관위의 지역구 결합 비례제
 - 석패율제의 문제점 및 정의당의 검토지점
- 연구성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및 당내 입장정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제 : 고용보험법 개정 전망과 실업안전망 확 충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8월 23일 - 8월 28일(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실업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안 모색 ○ 연구내용 :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일자리 이동간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수 청년세대에게 교섭권을 주기 위해 고용보험재정을 확대를 꾀해 가야함.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완화해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경과 후(호주 8-12주, 핀란드 90일, 독일 1분기, 일본 3개월)에는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아예 고용보험가입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 ○ 연구성과 : 정부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근거 수립과 정의당 노동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2016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

- 연구기간 : 2015년 9월 5일 - 9월 10일(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수급액 인상, 수급기간 30일 확대 등 골자로 한 2016년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 연구내용 : 보장성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문제 많은 고용보험을 개혁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을 크게 손보는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함. 이는 법률적·실질적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것은 물론, 가입 대상을 취업자만이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사람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개혁해 가자는 것. 이러한 고용보험개혁에는 당연히 고용보험 운영의 민주화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 이번처럼 돈은 노-사가 마련하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부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보험기금의 각종 전용 등 문제점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
- 연구성과 :정의당 노동정책 기초자료와 총선 기본공약 준비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희망펀드와 임금피크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1일 - 10월 5일(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정부가 도입한 청년희망펀드가 청년일자리 문제에 유효한 대책인지 검토하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여론 동향이 향후 노동개혁에 미칠 영향 연구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통한 13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생긴다는 정부 주장은 55-59세 고령 노동자가 모두 정년까지 직장에 다니고, 기업이 인건비 절감비용 전액을 청년 신규고용에 쓴다는 식의 불가능한 전제로 만들어진 전망치. 하지만 8월 18일 발표한 '청년 의식 조사'에서 20-34세 청년층의 70.3%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찬성. 같은 조사에서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 묻는 질문에는 75.3%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답. 정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청년은 소수다. 하지만 다수는 어떤 식으로건 앞 세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
- 연구성과 : 정의당 총선 공약 작성 기본 자료로 활용

주제 : 국회 인턴·입법보조원의 일자리 실태와 대안

- 연구기간 : 2015년 9월 21일 - 10월 21일(30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국회 내 청년일자리인 의원실 인턴들의 노동실태와 대안마련
- 연구내용 : 국회 인턴들은 주당 평균 58.8시간 일하는 반면 임금은 134만원(기본급 120만원, 정액 연장근로수당 14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안정성이 불안정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마련이 필요함
- 연구성과 : 국회인턴유니온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의 청년노동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더 많은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30일 - 11월 14일(16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실업자)을 고려한 청년 실질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22.4%를 기록 중.
- 연구내용 : ▲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미취업청년 신규고용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46만 5천개 창출. ▲ 상시·지속업무 수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10대 재벌 사내하청 등 즉시 정규직 전환. ▲ 안전, 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탈법적 장시간 근로 퇴출. 법정 근로시간 52시간 지켜 62만개 일자리 창출
- 연구성과 : 정의당 20대 총선 기본자료로 사용되며, 시도당 등 각급 당부의 기초공약 작성 자료로 활용

주제 : 실업안전망 전면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1월 15일 - 11월 30일(1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보장성 약한 고용보험 제도의 개혁 및 고용보험 밖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안전망 구축 과제 연구
- 연구내용 : ▲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제공과 30세 미만에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차별 폐지 등 고용보험 전면개혁 ▲ 특수고용노동자의 의무가입 확대 및 고용보험 자율가입 제도 확대, 자율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두루누리사업 개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장기실업자 및 급여소진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실업부조 제도 도입
- 연구성과 : 정의당 20대 총선 기본자료로 사용되며, 시도당 등 각급 당부의 기초공약 작성 자료로 활용

주제 : 청년노동권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연구기간 : 2015년 12월 1일 - 12월 15일(15일)
- 연구분야 : 환경노동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열정페이 등으로 저하된 청년노동권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연구내용 : ▲ 인턴제도 폐지, 기존 인턴은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계약직으로 일원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시 교육목적 명확화, 현장실습 위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실시, 수습사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하게 한 최저임금법 조항 폐지, ▲ 사진, 키와 체중, 출신대학, 출신지역, 부모 소득과 학력, 나이와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요소 없는 표준이력서 사용 의무화 및 면접시 해당 질문 금지, 기업의 면접 남발을 막기 위한 면접비 법제화 ▲ 노동부 근로감독관 2배 증원으로 근로감독 철저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위반 악성사업장 인터넷 검색제도 도입
- 연구성과 : 국회인턴유니온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의 청년노동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주제 : 알리스키 변화의 정치학과 다음세대의 정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자체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알리스키의 정치철학으로 본 한국정치 변화의 가능성 탐구
- 연구내용 : 알리스키의 정치 철학, ‘비관론에 근거하되 그 안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 ‘세대의 자기기억에서 출발하되 더 큰 변화를 위해 더 많이 대표’의 원리를 통해 진보나 보수 이데올로기 자체에 집착하지 않은 변화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음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민주적 정당정치론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로와 현대 정당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이해 도모
- 연구내용 : 그리스의 민주적은 제한된 역사적 지리적 조건에서 가능했던 모델.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였던 선거가 민주주의적 제도로 발전한 정당들의 역할 때문.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음. 정당의 강화는 그런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필수적 과제임.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소명으로서의 정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대표적 정치철학자인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독해를 통해 막스베버 정치철학의 주요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 이해
- 연구내용 :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를 통해 서구 합리주의와 자본주의 연원 탐구.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이를 현대 대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환경에서 활동하는 직업정치인에게 적용됨. 베버는 이 저작에서 자본주의적 합리화에 조응하는 협소한 선택이 있을 뿐이며 이는 키리스마적 자질을 갖춘 직업적 정치리더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고 분석.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선거의 이론과 실제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선거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선거제도의 비민주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를 해명
- 연구내용 : 선거는 그리스 민주정 당시에는 귀족정의 원리였으나,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결합했다. 근대 이후에도 선거는 투표권 자체가 모든 시민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귀족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보통투표권과 대중정당의 출현으로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 수 있게 되었다.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정치적 말의 힘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와 재임시기 주요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지도자의 언어가 주는 정치적 역량의 중요성을 탐구
- 연구내용 : 2002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연설,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등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연설은 담론의 틀을 다르게 짜면서도 인종과 계층 종교적 이슈에서 통합적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제출한다.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의회정치의 이해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의회의 특징을 선거와 정당, 행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다시 돌아보며 민주적 정치에서 의회의 중요성을 연구
- 연구내용 : 한국 정치에서 의회는 불성실과 비효율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 의회는 1988년 민주화 이후 첫선거에서 비교해보자면 22배의 예산, 15배의 법률안 제출 등 크기에 비해 너무 커다란 임무를 맡고 있다. 의회 정치에서 기본 유닛은 정당이며, 정당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정치가 이뤄진다. 비대한 행정부에 비해 작은 의회는 결국 행정권력 위주의 통치를 불러온다.
- 연구성과 : 미래정치센터 교육자료 및 당원교육자료 활용되었으며, 정치개혁 기본과제로 수용

주제 :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

- 연구기간 :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15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위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임금피크제가 청년시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
- 연구내용 :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지 않으며 필요한 것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비단 노동계만의 주장도 아니다. 그러나 주장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세대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세대 간 상생과 주변부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결과는 아닌지,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깊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 연구성과 : 노동개혁 관련 당론 수립에 기여.

주제 : 정의당의 정치적 선택

-당 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검토 해야 할 것들

- 연구기간 : 2014년 10월 01일 - 2015년 02월 05일(4개월 05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야권 전체가 안팎으로 재편의 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함
- 연구내용
 - 왜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인가
 - 왜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를 말하나
 - 당원들의 절망과 기대
 -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정의당의 현재와 미래
- 연구성과
 - 제2창당을 앞둔 시점에서 당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주제 : 한국 주류 양대 정당의 약한 고리 분석

- 연구기간 : 2015년 02월 25일 ~ 04월 24일(2개월 00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현재 한국의 주류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약한 고리를 다루고, 이를 통해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생존조건을 탐색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주류 정당 공통의 약한고리
- 보수정당의 약한 고리
- 개혁적 자유주의 정당의 약한 고리

○ 연구성과

- 진보정당의 생존조건을 탐색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당체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함.

주제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네트워크 형성 방안

- 연구기간 : 2014년 11월 03일 - 03월 16일(4개월 13일)
- 연구분야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 연구목적
 - 탈핵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동맹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함
- 연구내용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생태계의 실태조사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유관 네트워크 현황조사
 - 재생가능에너지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제안
- 연구성과
 - 당의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주제 : **대안적 한국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가능성**

- 연구기간 : 2015년 04월 13일 - 08월 10일(3개월 27일)
- 연구분야 : 국회운영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 · 개발내용

○ 연구목적

- 진보정치 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보적 성장 담론이 제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연구내용

- 한국 정치경제와 담론 : 이론과 역사
- 대안적 정치경제 담론의 본격화
- 진보정치 세력의 비전과 성장담론
- 노동주도 사회적 경제 성장론을 위해

○ 연구성과

- 당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됨

주제 :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1항의 위헌성 및 개정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07월 10일 - 10월 28일(3개월 18일)
- 연구분야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연구방법 : 외부전문가

연구·개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자금법 제6조, 제45조 제1항의 위헌성 및 개정 방안 연구○ 연구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연구는 정치자금법 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당 후원회 제도를 금지하고, 동법 45조 1항은 정당에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정치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연구는 정당 후원회 제도의 폐지가 자유로운 정당 경쟁을 제약하고 있으며, 또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결론 도출○ 연구성과<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대응 및 정세분석 자료로 활용

관 계 법 조 문

정 당 법

- 제35조(정기보고) ①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과 시·도당은 제17조(법정시·도당수) 및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